



주간통일정세 2011-20(2011.05.09~05.15) 발행 통일연구원 발행인 통일연구원장
주소 서울시 강북구 한천로 1307(수유동) 통일연구원 (우) 142-728
전화 02) 900-4300 전송 02) 901-2547
E-mail webmaster@kinu.or.kr http://www.kinu.or.kr

주간 통일정세

2011-20

Contents

- >> I. 북한동향 1. 대내정세 2. 대외정세 3. 대남정세
- >> II. 동북아정세 1. 대북한 관련 2. 주변국 관련

주간통일정세는 북한 및 국내외 언론보도를 참조하여 작성된 것임.



I. 북한동향

1. 대내정세

가. 정치

- **北 김정일, 김형직사범대 공연 관람(5/10, 조선중앙통신)**
 -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이 김형직사범대학 예술소조 공연을 관람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보도
 - 중앙통신은 10일 "김정일 동지께서는 새 세대 청년대학생들이 강성대국 건설의 주요 전투장에서 큰 몫을 맡아 훌륭히 수행함으로써 사회주의 조선의 앞날은 밝고 창창하다는 것을 실천으로 증명해주고 있다고 하시며 주체혁명 위업 완성은 확정적이라고 말씀하셨다"고 전함.
 - 이어 "출연자들은 영원히 당을 따라 백두에서 개척된 주체혁명 위업을 대를 이어 끝까지 완성할 대학생들의 철석같은 신념과 의지를 힘있게 과시했다"고 덧붙임.
 - 공연관람에는 리영호 당 중앙군사위원회 부위원장과 김기남·최태복 비서, 김경희 당 경공업부장, 강석주 내각 부총리, 장성택 당 행정부장, 김정각 군 총정치국 제1부국장, 김양건·박도춘·최룡해·태종수·김평해·문경덕 당 비서가 동행
 - 주규창 당 기계공업부장과 우동측 국가안전보위부 제1부부장, 리명수 인민보안부장을 비롯해 당 중앙군사위원들인 김경옥 당 조직부 제1부부장, 김원홍 총정치국 부국장, 김영철 경찰총국장과 현철해 국방위원회 국장도 공연을 함께 봤지만 후계자인 김정은 당 중앙군사위 부위원장은 수행단 명단에서 거명되지 않았음.
- **美 프랭클린 그레이엄 목사 방북(5/10, 조선중앙통신; 자유아시아방송(RFA))**
 - 미국의 저명한 부흥전도사 빌리 그레이엄 목사의 아들인 프랭클린 그레이엄 목사가 10일 방북해 박의춘 외무상과 만수대의사당에서 담화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보도
 - 중앙통신은 담화 내용이나 그레이엄 목사의 방북 이유는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으나 미국의 대북 식량지원 재개 여부가 조만간 결정될 시점에 이뤄진 방북이라 주목
 - "1990년대에 북한 주민 100만 명 이상이 굶어죽었는데 지금도 그 때만큼 심각하다"면서 미국의 대북 식량지원 재개를 촉구했다고 자유아시아방송(RFA)이 보도
 - 그는 미국의 대북 식량지원 재개 결정이 권력승계 과정에 있는 북한



의 새 지도부를 대회의 장에 나오게 하는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고 RFA는 전함.

- RFA는 대북 구호 활동은 물론 정치권에서도 큰 영향력을 가진 그레이엄 목사가 식량지원 재개의 시급성을 강조한 것은 의미가 크다고 평가

● **지재룡 주중 北대사, 中國방부장 면담(5/10, 평양방송)**

- 지재룡 중국주재 북한대사가 9일 양광례(梁光烈) 중국 국방부장을 예방했다고 평양방송이 보도
- 평양방송에 따르면 양 부장은 지 대사를 접견해 환담하면서 "중국과 조선의 친선은 시련을 이겨내고 피로써 맺어진 것이다. 중국과 조선 인민은 미제의 침략을 반대해 어깨를 곁고 싸웠다"고 강조
- 베이징 외교가에서는 지 대사가 대사 직책으로는 쉽게 접촉하기 어려운 중국의 당·정 고위인사를 집중적으로 만나는 것에 대해 북한의 후계자인 김정은 당 중앙군사위원회 부위원장의 방중을 앞두고 준비 작업을 하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음.

● **'애국열사릉' 확충에 부쩍 열 올리는 北(5/11, 연합뉴스; 조선중앙통신; 자유아시아방송(RFA))**

- 최근 북한이 우리의 국립묘지격인 '애국열사릉' 확충에 부쩍 열을 올리고 있어 눈길을 끌고 있다며 연합뉴스가 보도
- 조선중앙통신에 의하면 북한은 지난 2008년 말부터 새 열사릉 건축에 박차를 가하면서 올해 4월까지 모두 10곳의 열사릉을 새로 조성한 것으로 확인됨.
- 2008년은 북한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뇌졸중으로 쓰러진 해로 알려져 있어 열사릉 확충과의 관련성이 주목된다고 연합뉴스는 보도
- 북한은 2008년 12월 평성열사릉 준공을 시작으로 2009년 8월 함흥, 12월 해주·사리원, 2010년 6월 혜산, 7월 평양·원산, 8월 강계·청진, 2011년 4월 신의주열사릉을 잇달아 완공함.
- 미국의 위성사진 분석전문가인 커티스 멜빈씨도 자유아시아방송(RFA)에 "애국열사릉이 모두 근래에 지어진 새 것"이라고 확인함.
- 북한이 이처럼 열사릉 건축에 열을 올리는 것은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건강악화와 후계구도 구축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대체적인 견해라고 연합뉴스는 밝힘.
- 북한 내부적으로 김정은 후계구도를 그려나간 시기와도 일치한다는 점에서 북한 당국이 원로급 간부들을 대우함으로써 권력층의 충성심을 높이고 이탈을 막고자 '열사릉 전략'을 사용했다는 분석까지 가능하다고 뉴스는 전함.



● **北김정은 '구호'에도 등장...우상화 본격화(5/11, 연합뉴스; 조선중앙TV)**

-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의 후계자인 김정은 노동당 중앙군사위원회 부위원장이 '정치구호'에도 실명으로 등장함으로써 우상화 작업이 본격적으로 진행 중인 것으로 확인된다며 연합뉴스는 보도
- 조선중앙TV가 11일 오후 6시부터 약45분 간 방송한 다큐멘터리 영화 '민족 최대의 명절 2월16일'에는 김정은에 대한 우상화 흔적이 곳곳에서 포착
- 가장 눈길을 끄는 장면은 군부대 공연 후 촬영한 것으로 보이는 사진 속에서 '경애하는 최고사령관 김정일동지와 존경하는 김정은 대장동지를 위하여 한목숨 바쳐 싸우자'는 글귀가 담긴 플래카드가 등장한 것으로 김 위원장과 김정은의 이름을 함께 놓고 충성을 강조함으로써 세습을 위한 분위기 조성 노력이 진행 중임을 보여준 것이라고 연합뉴스는 전함.
- 중앙TV가 방송한 영화는 대부분 김정일 위원장의 올해 생일행사의 일환으로 열린 김정일화 전시회, 얼음축전, 음악공연 등을 종합적으로 편집했는데 후계자 김정은을 암시하는 대목이 여러 군데 담김.
- 공연 장면에서는 김정은에 대한 첫 찬양가요인 '발걸음' 연주와 합창 모습이 포착됐고 북한 여성들의 수예작품을 소개하는 장면에서는 '발걸음'의 가사를 수놓은 작품도 등장했으며, 또 얼음축전에서는 '수령복' '장군복' '대장복'이라는 얼음조각이 등장했는데 이를 통해 '고 김일성 주석-김정일 위원장-김정은'으로 이어지는 3대 세습을 정당화하고 있음을 보여줌.
- 이에 대해 한 북한 전문가는 "북한은 김정일 위원장의 생일행사 속에서 김정은을 우상화함으로써 후계자에게 부족한 정치적 리더십을 채우려는 것으로 보인다"며 "앞으로 이러한 노력은 더욱 가속화될 것이다"고 내다봄.

● **北김정일, 평북 구장양어장 시찰(5/12, 조선중앙통신)**

- 북한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평안북도 구장군의 구장양어장을 현지지도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12일 전함.
- 중앙통신이 김 위원장의 공개 활동을 전한 것은 지난 10일 김형직사범대 공연 관람 이후 이틀만으로 후계자인 김정은 노동당 중앙군사위원회 부위원장은 동행하지 않았다고 보도
- 김 위원장은 양어장을 돌아보고 "최근 군대와 사회가 건설한 양어장에서 많은 민물고기가 생산돼 군인과 인민이 그 덕을 크게 보고 있다"며 "이 전변은 양어를 대대적으로 발전시킬 데 대한 우리 당정책의 정당성과 생활력을 힘 있게 입증해주고 있다"고 강조했다고 중앙통신이 밝힘.



- 현지지도에는 리영호 당 중앙군사위원회 부위원장과 김경희 당 경공업부장, 장성택 당 행정부장, 김정각 군 총정치국 제1부국장, 김평해 당 비서, 우동측 국가안전보위부 제1부부장, 리명수 인민보안부장, 현철해 국방위 국장, 리만건 평북도 당책임비서가 수행함.

■ 김정일 동향

- 김정일, 김형직사범대학 예술소조공연 관람(5/9, 중방·중통)
 - 리영호, 김기남, 최태복, 김경희, 강석주, 장성택, 김정각, 김양건, 김영일, 박도춘, 최룡해, 태종수, 김평해, 문경덕, 주규창, 우동측, 리명수, 김경옥, 김원홍, 김영철, 현철해 등과 함께 관람
- 김정일, 희천발전소 건설 지원에서 모범을 보인 일꾼들에게 '감사' 전달(5/9, 중방)
- 김정일, 구장양어장(平北 구장군 소재) 현지지도(5/12, 중통·중방)
 - 리영호, 김경희, 장성택, 김정각, 김평해, 우동측, 리명수, 현철해, 리만건(平北道黨 책임비서) 등 동행

■ 기타 (대내 정치)

- 北 노동당 대표단(김영일, 黨 비서)과 스웨덴 공산당 대표단('안데르스 칼손' 단장) 회담, 5.10 평양에서 진행(5/10, 중통·중방)
- 박의춘 외무상, 5.10 美 '프랭클린 그레이엄' 목사(美 비정부단체 '사마리탄즈 퍼스' 회장) 일행과 담화(5/10, 중통)
- '김영대'(최고인민회의 상임위 부위원장), 5.12 만수대의사당에서 訪北 '프랭클린 그레이엄' 목사(美 비정부단체 '사마리탄즈 퍼스' 회장) 일행과 담화(5/12, 중통)

나. 경제

● 北-中 신압록강대교 건설 본격화(5/9, 연합뉴스)

- 북한과 중국의 최대 교역 거점인 신의주와 단둥(丹東)을 잇는 신압록강대교 건설이 본격화되었다고 연합뉴스는 보도
- 이어 단둥 소식통들에 따르면 "이달 초부터 20여 명의 인부들과 2-3대의 대형 크레인 등이 동원돼 건설 자재를 운송할 선박 정박 시설 공사를 벌이고 있다"며 "부두 건설에 쓰일 철근과 상판 등이 공사 현장에 수북이 쌓인 가운데 매일 저녁 늦게까지 작업이 이뤄지고 있다"고 전함.
- 이어 또 다른 소식통은 "이달 말 북한과 중국 고위층이 참석한 가운데 인근의 압록강 섬인 황금평 개발 착공식이 열릴 예정"이라며 "이 착공식에 맞춰 정박지 공사를 마무리 지으려는 것 같다"고 말함.



- 북한과 중국은 2009년 10월 원자바오(溫家寶) 중국 총리의 방북 당시 신압록강대교 건설에 합의했으며 지난해 12월 31일 양국 고위 인사들이 참석한 가운데 착공식을 했으며, 건설 비용(17억 위안) 전액을 중국이 부담, 3년 뒤 완공 예정인 신압록강대교는 기존 압록강 철교에서 8km가량 하류에 건설돼 신의주 남부와 단둥 신도시가 들어서는 랑터우를 연결한다고 연합뉴스는 전함.
 - 북한과 중국은 이 다리 건설과 함께 인근 압록강 섬인 북한의 황금평 자유무역지구 합작개발도 이달 말부터 본격 추진하기로 하는 등 압록강 일대 경제협력에 속도를 내고 있다고 함.
- "北-中 '경협 통로' 구축 가속화"(5/9, 연합뉴스)
- 연합뉴스는 북한과 중국이 양국 '경제협력 통로' 확보에 속도를 내기 시작했다고 보도
 - 두만강 교역 창구인 중국 훈춘(琿春)과 북한 라진을 잇는 도로 보수 공사를 시작하기로 한데 이어 압록강 유역 최대 무역 거점인 신의주와 단둥을 연결하는 신압록강대교 건설도 본궤도에 올랐다고 뉴스는 전함.
 - 훈춘-라진 도로 보수는 중국이 공을 들이는 두만강 유역의 동해 항로 확보와 양국이 합작개발기로 한 라선특구 개발의 교두보라는 점에서 북-중 경협이 새로운 단계로 들어섰음을 의미
 - 신압록강대교 역시 북-중 교역의 70%를 차지하는 신의주와 단둥의 교역량을 대폭 늘릴 수 있게 된다는 점에서 양국 교역 확대의 전기가 마련될 것으로 여겨지고 있다며 뉴스는 주목
 - 우선 훈춘-라진 도로 보수가 끝나면 중국은 부두 사용권을 확보하고도 비포장도로여서 운송력이 떨어지는 기존 도로 때문에 이용하지 못하는 라진항을 이용한 화물의 남방 운송을 본격화할 수 있으며, 또 무산 등 훈춘과 인접한 북한의 석탄과 철광 등 풍부한 지하자원 합작개발에도 적극적으로 나설 것으로 보인다며 뉴스는 보도
 - 2009년 10월 원자바오(溫家寶) 중국 총리의 방북 당시 건설에 합의하고도 이런저런 이유로 다리 건설에 적극성을 보이지 않았던 북한이 신압록강대교 건설에 응한 것은 황금평 합작개발을 고리로 한 중국의 설득 때문으로 보인다고 전함.
- "北-中, 28일 황금평 합작개발 착공식"(5/10, 연합뉴스)
- 북한과 중국이 압록강 하류의 섬 황금평 합작개발 착공식을 이달 28일 열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고 연합뉴스가 보도
 - 연합뉴스는 10일 단둥(丹東)의 소식통들에 따르면 북-중 양국은 중앙 고위급 인사가 참석한 가운데 오는 28일 착공식을 하고 황금평 개발을 위한 기반 조성 공사에 착수할 계획이라고 전함.
 - 이어 "북한에서는 장성택 노동당 행정부장이, 중국에서는 경제를 담당하는 왕치산(王岐山) 부총리가 참석할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이 자리에



- 서 황금평을 중국에 임대하는 국가 간 협정도 체결될 것"이라고 전함.
- 북한 합영투자위원회와 중국 상무부는 지난해 12월 베이징에서 황금평 합작 개발을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했으며, 임대 조건은 북한이 개발권을 중국에 50년 양도하고 50년을 추가 연장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 알려짐.
 - 북한은 투자자 유치를 위해 투자 자산과 수익을 보장해주는 내용 등을 담은 '황금평 특구법'도 지난해 마련했다고 북한을 방문했던 중국 학자들이 전함.
 - 중국은 단둥 랑터우(浪頭) 신도시 조성 완공 시점인 2015년을 전후해 황금평을 개발,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하겠다는 구상으로 이는 이달 초 착공한 신압록강대교 완공 시기와도 맞물린다고 연합뉴스는 전함.
- **"北 원산 재개발...혁명사적관 사라져"(5/10, 자유아시아방송(RFA))**
- 재개발에 한창인 북한 강원도 원산시가 혁명사적관과 그 앞에 서 있는 김일성 주석 기념탑까지 철거했다고 미국 자유아시아방송(RFA)이 10일 보도
 - RFA는 북한의 위성사진 분석가인 미국인 커티스 멜빈씨를 인용해 "원산혁명사적관은 김일성 주석을 기념하기 위해 세워진 것이라 중요한 의미를 지니는데 2009년 10월 촬영된 위성사진을 판독한 결과 사적관과 기념탑이 원래 자리에 없었다"고 전함.
 - 북한 외교관 출신인 고영환 국가안보전략연구소 연구위원은 "김정은의 3대 세습과 관련해 김정은이 원산초대소에서 태어났다거나 김정은의 생모인 고영희가 원산으로 이주해 살았다는 소문이 떠도는 것으로 볼 때 원산시 재개발은 김정은 우상화 작업의 일환일 수 있다"고 RFA에 말함.
- **"北 의화별이용 아편생산 대폭 확대"(5/11, 폭스뉴스)**
- 전문가들은 국제앰네스티(AI)가 지난 3일 공개한 북한 요덕 정치범 수용소의 위성사진을 분석한 결과 농경지 면적이 10년 전에 비해 크게 늘어난 것을 발견했다고 미국 폭스뉴스가 보도
 - 실제 요덕수용소 인근 위성사진을 보면 지난 2001년 발견된 아편 경작지의 북쪽으로 33만 에이커(약 13만²m²) 규모의 농경지가 늘어난 것을 확인할 수 있다고 폭스뉴스는 전함.
 - 한 전문가는 "요덕 수용소의 농작지 규모가 늘어난 것을 보고 깜짝 놀랐다"면서 "이 곳은 지난 2001년 처음 발견했을 때부터 아편 생산을 위한 농지였고 지금도 그렇다"고 말함.
 - 폭스뉴스와의 인터뷰에서 북한 인권위원회 척 다운스 사무총장도 "수용소를 관리하는 북한군은 수감자들이 흙칠까봐 농작물 생산을 허용하지 않고 있다"면서 "그래서 마약을 재배하고 있는 것"이라고 말함.
 - 이어 그는 "마약 생산 확대는 무역제재로 인해 경제가 어려워진 북한이 의회를 벌어들이기 위한 대체수단을 강구한 것"이라고 강조



- 다운스 사무총장은 특히 "북한 정권은 당 간부용 선물을 위해 외화를 쓰는데 지난해에는 외화가 없어 중국산 선물이 도착하지 않는 바람에 대규모 당 행사가 지연된 적도 있었다"고 전함.
- 북한이 이처럼 마약 재배를 대폭 늘린 것으로 추정되지만 서방국가들은 주로 북한의 핵 관련 수출에 초점을 맞춰왔기 때문에 이를 간과하는 경향이 있었다고 뉴스는 분석
- 지난 1990년대 중반부터 대규모 헤로인 생산을 시작했는데, 정확한 규모는 알 수 없으나 한해 5억~10억 달러 어치를 수출하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고 뉴스는 전함.
- 특히 미 의회조사국(CRS)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10여 년간 50명 이상의 북한 외교관이나 노동자가 20여 개국으로 마약을 운반하던 중 체포된 것으로 알려짐.

● 인도지원 재개 후 첫 방북 마친 유진벨재단(5/11, 연합뉴스)

- "남북관계 악화에도 북한 주민의 생명을 살리는 일에는 남북한이 어느 정도 인식을 공유하고 있다는 점이 고무적입니다." 지난달 19일부터 30일까지 북한을 방문해 북한 내 내성결핵 환자의 상태를 점검하고 내성결핵약품을 전달하고 돌아온 대북지원단체 유진벨재단의 인세반(미국명 스테판 린튼) 회장의 전언이라며 연합뉴스가 보도
- 미국적자인 인 회장은 11일 "여러 사건으로 남북교류가 거의 중단된 상황이지만 한국 정부가 내성결핵약의 반출을 승인해줬고 북한에서도 협조를 잘해줘 아무 문제없이 결핵환자의 상태를 점검할 수 있었다"고 방북 성과를 설명
- 인 회장은 "내성결핵센터에 대한 모니터링이 만족할만한 수준은 아니다"면서도 "정기적으로 방문해 환자 상태를 눈으로 보고 관리서류도 일일이 점검하는 등 철저한 모니터링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말함.
- 그는 "결핵의 발병원인 중 하나가 영양부족인 만큼 여건이 조성되면 영양제나 식량 지원을 추가 지원할 것"이라고 계획도 밝힘.
- 유진벨재단은 2009년부터 평안남북도와 평양시, 남포시 등 북한 서북 지역에 내성결핵센터 6곳을 마련해 내성결핵환자 약 500명에게 완치될 때까지 약품을 공급하고 있으며, 이번 방북 때는 이들 중 결핵이 완치돼 '졸업'하는 환자 약 20명에게 색종이로 만든 목걸이를 걸어주는 뒤풀이를 했다고 연합뉴스는 보도

● 남북교역 중단 후 北인력 中에 대거 유입(5/11, 연합뉴스)

- 천안함 사태에 따른 남북교역 중단 이후 북한의 봉제공들이 대거 중국으로 유입되고 있다고 연합뉴스가 보도
- 11일 단둥(丹東) 소식통들에 따르면 최근 의류공장이 밀집해 있는 압록강 하류 동강(東港) 일대에 파견돼 일하는 북한의 봉제공이 1천여 명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된다고 뉴스는 전함.
- 한 소식통은 "예전에 400-500명에 불과했으나 남북교역 중단에 따라



한국 의류업체들의 위탁가공이 끊기면서 1년여 만에 배가량 급증했다"며 "북한 봉제공들은 외부와 전면 차단된 채 공장 내에서만 머물며 일하고 있다"고 말함.

- 이어 "최근 급등한 중국 인건비의 50-70% 수준에 불과한 저임금도 매력이지만 한국 업체들과 오랫동안 교역하면서 수준 높은 기술을 갖췄고 밤샘 근무까지 군소리 없이 해내 효율성이 높다"고 덧붙임.
- 이에 앞서 지난해 11월 연변(延邊)조선족자치주 훈춘(琿春)과 투먼(圖們) 의류업체들도 인력난 해소를 위해 1천600여 명의 북한 봉제공들을 고용하겠다고 중국 정부에 허가를 신청
- 또 지난 1월에는 이기범 선양주재 북한총영사가 헤이룽장(黑龍江)성 무단장(牡丹江)시를 방문, 2천여 명의 여성 근로자 고용을 요청하는 등 북한과 중국이 경제협력의 새로운 모델로 북한 근로자의 중국 송출을 적극 모색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뉴스는 전함.

● "佛구호단체, 북한서 젓소농장 추진"(5/11, 자유아시아방송(RFA))

- 프랑스의 한 국제구호단체가 북한 어린이에게 낙농제품을 공급하고자 현지에서 젓소농장사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자유아시아방송(RFA)이 11일 보도
- 방송에 따르면 프랑스의 '트라이앵글 제너레이션 휴머니테어'는 올해 황해북도 사리원군에 젓소농장을 만들고 190여개 사회보육시설에 있는 0~6세의 북한 어린이 1만4천명에게 고단백질 식품을 제공할 예정이라고 함.
- 이 단체의 앤 트레혼다 북한사업담당관은 "올해 139만유로(한화 약 22억원)를 들여 사리원에서 젓소농장 사업을 시작한다"며 "기존에 운영하던 함경남도 영광군과 신흥군의 양어장도 기술 전수를 해 2012년 10월까지 계속할 것"이라고 밝힘.
- 한편 방송은 민간단체의 대북 식량지원과 달리 유럽연합(EU) 차원의 식량지원은 아직까지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전함.

● 北 모내기 시작...거국적 집중' 독려(5/11, 조선중앙통신; 노동신문)

- 북한의 평안남도 평원군 원화리 원화협동농장에서 올해 모내기가 시작됐다고 조선중앙통신이 전함.
- 이어 중앙통신은 "전에 없이 불리한 일기조건 속에서도 이곳 일꾼과 농장원들은 벼모판 관리에 힘을 쏟아 실한 모를 키워냈다"며 "트랙터(트랙터)를 비롯한 농기계 수리·정비도 제때 끝내고 만반의 준비 끝에 모내기에 진입했다"고 전함.
- 또한 동신문은 이날 사설을 통해 "농사에 모든 것을 복종시키는 원칙에서 모내기 전투에 필요한 로력과 설비, 물자들을 최우선적으로, 무조건 보장해줘야 한다"며 "밥을 먹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모내기전투에 한 사람 같이 떨쳐나 온 나라가 농촌지원으로 법석 끊게 해야 한다"고 강조



- **中 상하이의 북한 단체관광 7월 재개(5/11, 동방조보)**
 - 동방조보(東方早報)의 11일 보도에 따르면 북한 전문 여행사인 상하이 진뤄(上海錦游)는 7월1일부터 고려항공 전세기를 이용해 금강산과 아리랑공연 등을 관람하는 4박5일의 북한 관광을 재개
 - 이번에 재개되는 북한 관광의 항공편은 과거와 달리 베이징(北京)과 선양(沈陽)을 경유하지 않는 직항 편으로 북한까지 3시간이면 도착하게 돼 비행시간이 절반가량으로 줄어들며, 또 금강산 관광이 처음으로 중국인 관광객들에게 개방된다고 동방조보는 전함.
 - 상하이-북한 관광은 작년 4월부터 8월까지 재개되다 11월 천안함 사건이 터지면서 중단됐으며, 이번에 다시 시작하게 되었다며 방송은 전함.
 - 그러나 작년 이 여행 상품을 이용해 북한을 관광한 중국인은 300명에 못 미치며 상하이진뤄가 여행객의 70%를 모집한 것으로 알려짐.

- **"3월 북미교역 74만 달러...모두 구호물품"(5/12, 자유아시아방송(RFA))**
 - 지난 3월 미국과 북한 사이의 교역액은 약 74만 달러(한화 8억여 원)로 모두 미국에서 북한으로 보내는 구호물품이었다고 자유아시아방송(RFA)이 12일 보도
 - RFA는 미국 상무부 보고서를 인용해 "올해 들어 북미 간 교역은 3월에 처음 있었고 총 교역액 73만7천 달러가 미국 측의 구호물자였다"고 전함.
 - 미 상무부는 메릴랜드주의 볼티모어와 워싱턴주 시애틀에서 각각 7만 달러어치와 66만7천 달러어치의 구호물자가 북한으로 떠났다고 밝혔지만 출항 날짜와 구체적 품목은 확인되지 않았다고 RFA는 설명함.
 - RFA에 따르면 올해 3월의 북미 간 교역액은 지난해 3월의 28만 달러와 비교해 2.6배로 늘었으며 작년의 경우엔 구호물자가 아닌 열매가 달리는 관목이 주로 북한에 수출됨.

- **"北 고위관리 등 통해 슈퍼노트 유통"(5/14, 미국의소리(VOA))**
 - 북한 정부가 100달러짜리 위조지폐인 '슈퍼노트'를 유통시키는 과정에서 고위 외교관 등을 활용하는 등 위조지폐 생산을 전반적으로 조직·감독한 정황이 드러났다고 미국의소리(VOA)방송이 보도
 - 방송은 미국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 담당 선임자문관을 지낸 데이비드 애셔 말을 인용해 북한의 엘리트 계층이 은행과 도박장 등에서 슈퍼노트를 넘기는 모습을 사진을 통해 확인했다고 전함.
 - 미 재무부 산하 조직으로 백악관의 경호를 담당하는 비밀검찰국(SS)도 2002년 봄 북한 정부와 고위 외교관들과 국영 무역회사 직원들을 통해 범죄조직 등에 슈퍼노트를 유통시킨 것으로 보고했다고 방송은 덧붙였다.
 - 애셔 전 선임자문관은 올해 초 워싱턴의 민간연구기관인 신미국안보센터(CNAS)가 발표한 보고서를 통해 "SS는 북한 정부가 슈퍼노트의 디



자인과 제조, 유통 과정을 조직하고 감독했다는 확실한 증거를 제시하는 등 북한이 1980년대 후반부터 슈퍼노트 생산 분야에서 세계 최고가 됐다"고 보고

- 그는 또 미 연방 워싱턴D.C. 법원도 다량의 슈퍼노트가 북한 정부의 지원으로 북한 내부에서 제조됐으며 정부 당국자로 활동하는 북한인들이 전 세계에서 위조지폐의 판매와 운송에 참여하고 있음을 확인했다고 덧붙였다.

다. 군사

● "북한-이란 미사일 기술 정기적 교환" <유엔보고서> (5/15, 로이터통신)

- 유엔은 북한과 이란이 유엔 제재조치를 어기면서 탄도미사일 기술을 정기적으로 교환해온 것으로 보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으며 로이터통신이 전함.
- 로이터 통신이 14일 입수한 유엔 기밀 보고서에 따르면 양국의 이 같은 불법적 미사일 기술 교환은 "인접한 제3국을 통해" 이뤄졌다고 함.
- 다수의 외교관들은 익명을 전제로 보고서에서 언급된 제3국이 중국이라고 추정함.
- 이 보고서는 북한이 2006년과 2009년 두 차례 핵실험을 실시한 뒤 유엔 안보리가 취한 제재 조치가 준수되고 있는지를 감시해 온 전문가 패널이 안보리에 제출한 것으로 이 보고서는 "금지된 탄도 미사일 관련 부품이 고려항공과 이란 에어의 정기 항공편을 통해 북한과 이란 사이에서 이송됐다는 의심이 있다"고 지적함.

라. 사회 · 문화

● "北 각지 사찰서 석탄일 통일기원 법회" (5/10, 조선중앙통신)

- 석가탄신일인 10일 북한 각지 사찰에서 조국통일기원 남북불교도 동시 법회가 열렸다고 조선중앙통신이 보도
- 중앙통신은 조선불교도연맹 중앙위원회 관계자 등이 동시법회에 참석했고, 연설자들이 "불심화합해 조국통일을 실현하기 위한 투쟁에 더욱 힘차게 떨쳐나서야 한다"고 말했다고 전함.
- 또 "동시법회에서 남북공동선언을 통일의 이정표로 삼고 민족끼리의 가치 밑에 힘을 합쳐 통일의 그날을 앞당겨 나가기 위한 실천에 용맹정진해 나갈 데 대한 북남공동발원문이 봉독됐다"고 덧붙였다.

● 中단둥 휴대전화 불통 잦아..北전파방해인듯(5/11, 연합뉴스)

- 올해 들어 압록강을 사이에 두고 북한 신의주와 마주한 중국 단둥(丹東) 일대 휴대전화 불통 사례가 부쩍 잦아졌다고 연합뉴스가 보도
- 단둥 주민들은 신의주 일대 북한 주민들이 단속망을 피해 중국과 은밀



- 하게 통신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 북한당국이 전파 방해를 강화했기 때문으로 보고 있다고 뉴스는 전함.
- 단둥 주민들에 따르면 올해 들어 휴대전화 불통이 잦아졌으며 특히 '133' 번호의 휴대전화 통신 장애가 심각하다고 뉴스는 밝힘.
 - 이어 133 번호의 통신 장애가 유독 심한 것은 북한의 전파 방해가 북한 주민과 중국 내 한국인들의 통신 차단에 초점을 맞췄기 때문으로 여겨지고 있다고 전함.
 - 연합뉴스와의 인터뷰에 한 주민은 "북한이 정치적으로 민감할 때마다 반복됐던 현상"이라며 "재스민 혁명 이후 불온사상이 유입되는 것을 차단하고 북한 내부의 열악한 상황이 외부에 알려지는 것을 막기 위해 북한당국이 전파 방해를 강화했기 때문으로 보인다"고 말함.
- **北 "방사성물질 농도 급감...동서해 영향 없어"(5/12, 조선중앙통신)**
- 북한지역에 방사성 물질이 미량 검출되다가 이 달 초부터 농도가 크게 떨어졌고 동서해 물고기나 바닷물에는 일본 원전사고의 영향이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고 조선중앙통신이 보도
 - 중앙통신은 "최근 조선에서 지난 3월12일 있었던 일본 후쿠시마 원자력 발전소 사고 이후 지금까지 환경방사능 감시결과가 발표됐다"며 "3월25일경 요오드-131과 세슘-137이 미량 검출되기 시작했고 4월초에 농도가 최대로 올랐다가 이달 초 최대 때에 비해 약 100분의 1로 떨어졌다"고 밝힘.
 - 중앙통신은 "조선의 동해와 서해에서 바다물과 식물, 물고기에 대한 핵종분석결과 일본의 핵사고 영향이 아직까지는 미치지 않은 것으로 평가됐다"고 덧붙임.
- **"美NGO, 北국립결핵원에 기술지원단 파견"(5/13, 자유아시아방송(RFA))**
- 미국의 민간단체 '조선의 그리스도인 벗들'이 평양 국립결핵원 수술실을 손보고 실험장비 사용법 등을 알려주고자 16명의 지원단을 북한에 파견했다고 자유아시아방송(RFA)이 밝힘.
 - RFA에 따르면 이 단체 하이디 린튼 대표와 미 스탠퍼드대 샤론 페리 박사 등이 포함된 지원단은 10일부터 24일까지 북한에 머무르며 국립결핵원의 수술실 개보수를 도울 계획이라고 함.
 - 또한 이 단체는 국립결핵원에 표준결핵연구소를 지었으며 이번에 북한 의료진에게 연구소의 실험 장비를 사용하는 방법도 알려줄 계획이라고 RFA는 전함.
- **"北 재스민혁명 여파 우려 申친지방문 불허"(5/14, 자유아시아방송(RFA))**
- 북한이 '재스민 혁명'으로 상징되는 아프리카·중동의 민주화 시위 여파를 우려해 주민들의 중국 친지방문 등 사적인(私事)여행을 완전히 통제하고 있다고 자유아시아방송(RFA)이 보도
 - 평양과 중국을 오가며 무역업을 하는 북한 거주 화교(朝僑)인 류모씨는



- "북한 당국이 금년 들어 북한 주민들에 대해 공무여행을 제외한 개인적인 여행을 일체 불허하고 있다"며 "화교들의 중국 여행도 전에 비해 중국 방문 절차가 까다로워졌다"고 전함.
- 방송은 다수의 북한 소식통을 인용해 "북한 당국이 주민들의 중국 내 친지 방문을 제한하는 것은 튀니지에 이어 이집트와 리비아 등지에서 일어난 민주화 운동 사태와 무관하지 않다"고 전함.
- 대북 소식통들에 따르면 북한은 지난해 당대표자회(9.28)를 한 달 여 앞둔 8월부터 주민들의 중국 친지 방문을 금지했다고 방송은 전함.
- 북한 당국은 11월 들어 친지들로부터 되도록 많은 경제적 도움을 받아오라며 다시 허용했으며 이를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후계자인 '청년대장(김정은 지칭)의 배려로 선전

2. 대외정세

가. 일반

- **조선신보 "빈라덴 사살은 오만한 제국주의"(5/9, 조선신보)**
 - 북한 매체들이 미국의 오사마 빈 라덴 사살에 침묵하는 가운데 북한 입장을 대변하는 재일본조선인총연합회(조총련) 기관지가 처음으로 미국을 비난
 - 조총련 기관지인 조선신보는 9일 '국가테러의 원흉'이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미국의 빈 라덴 사살작전을 "엄연한 주권침해 행위이며 오만한 제국주의"라고 비난
 - 조선신보는 "(미국이) 파키스탄 정부에도 사전에 알리지 않고 군사행동을 감행한 그 자체가 엄연한 주권침해 행위"라며 "이번 사건은 미국이야말로 국가 테러의 원흉임을 다시 한 번 극적으로 보여줬다"고 주장
 - 이어 "오바마가 회견에서 비밀작전을 직접 명령했고 '정의는 이뤄졌다'고 자랑스럽게 말하는 그 모습은 전 인류 위에 군림하듯 행세하는 오만 무례한 제국주의"라고 비난
 - 조선신보는 "빈 라덴이 9·11의 주모자라는 결정적 증거조차 없고 미국이 그를 용의자로 봤으면 죽이는 것이 아니라 재판에 걸어야 했다. 빈 라덴은 테러활동에 직접 관여하지 않는 상징적인 존재에 불과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분석이고 빈 라덴에 대한 평가도 객관적으로 해야 한다"고 주장
 - 또 "인터넷상에는 미국이 참 무서운 나라라는 것과 함께 테러는 앞으로 오히려 더 우심(심각)해질 것이라고 예측하는 목소리가 범람하고 있다. 미국은 제 무덤을 파고 있다"고 미국을 거듭 비난
- **클린턴 "중국과 北문제 솔직히 논의"(5/11, 연합뉴스)**
 - 연합뉴스에 의하면 힐러리 클린턴 미국 국무장관은 10일 제3차 미.중



전략경제대화를 통해 북한, 이란 문제를 포함한 "어려운 문제들"을 중국과 솔직히 논의했다고 밝힘.

- 클린턴 장관은 이틀간 열린 이번 전략경제대화 폐막식에서 "우리는 북한과 이란 문제부터 글로벌 불균형 해소에 이르기까지 우리의 가장 중요한 도전들의 일부에 대해 솔직한 논의를 했다"고 말함.
- 그러나 구체적으로 북한 문제와 관련해 중국 측과 어떤 논의를 했는지는 밝히지 않았다고 뉴스는 전함.

● **美 "남북한 대화, 北에 중요한 기회"(5/11, 연합뉴스)**

- 미국 정부는 북한이 비핵화에 합의할 경우 내년 서울 핵안보정상회의에 김정일 국방위원장을 초청하겠다는 이명박 대통령의 제안에 대해 남북한 대화가 북한에 중요한 기회가 될 수 있다고 연합뉴스에 밝힘.
- 마크 토너 국무부 부대변인은 이날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어떤 일이 일어날지 선불리 예측하지 않겠다"면서 "그러나 우리의 일관된 입장은 남북한 간 대화가 북한에 있어 진정성을 보이고 관계개선을 위한 행동을 취할 중요한 기회라는 것"이라고 말했다고 뉴스는 전함.
- 그는 또 "이 대통령의 제안과 관련 언론보도 등을 봤다"면서 "그렇지만 우리는 여전히 북한이 호전적인 행태를 바꾸겠다는 의지를 확실하게 보여주기를 원한다"고 강조
- 토너 부대변인은 이어 최근 김정일 위원장이 방북한 지미 카터 전 미국 대통령 일행을 통해 대화 재개 메시지를 보낸 데 이어 이 대통령이 남북 대화 가능성을 언급한 것이 대화 분위기의 진전을 보여주는 것이냐는 질문에 "그것은 한국 정부에 물어봐야 할 것"이라며 말을 아꼈.
- 이 같은 언급은 전날 미 행정부 고위 당국자가 연합뉴스에 "서울 핵안보정상회의에서 북한을 초청하는 문제는 한국의 결정사항"이라고 전제한 뒤 "국제사회는 내년 서울 핵 안보정상회 때까지 북한의 행동 추이를 지켜보고 판단해야 한다"고 밝힌 것과 같은 맥락으로 해석된다고 뉴스는 전함.

● **핵전문가들 '北경수로 사고위험' 잇단 경고(5/11, 미국의소리(VOA))**

- 영변에 몰려있는 핵시설이 대부분 노후한 데다 북한이 현재 건설 중인 경수로도 국제적 안전기준을 따르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자칫 일본 후쿠시마 원전사고 같은 대형참사로 이어질 수 있다고 전문가들은 경고하고 있다며 미국의소리(VOA)가 보도
- VOA에 따르면 미국 노틸러스연구소의 피터 헤이즈 소장은 최근 '북한의 핵 딜레마'라는 제목의 글을 통해 "북한이 경수로를 설계하고 건설하면서 국제적인 기준을 따르지 않기 때문에 북한에도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 사고 같은 사태가 발생할 수 있다"고 경고
- 헤이즈 소장은 "특히 북한의 낡고 오래된 송전선이 경수로에서 나오는 전력을 감당할 수 없을 것"이라며 "이로 인해 원자로 노심이 녹아내리는 사태가 발생할 수 있다"고 말하면서 "영변의 경수로에서 사고가 발생할



- 경우 북한이 혼자 수습할 수 없을 것"이라며 "한국이 경수로 건설 초기 단계부터 적극 개입하는 것이 한 가지 방안"이라고 제언
- 올리 하이노넨 전 국제원자력기구(IAEA) 사무차장도 VOA에 "북한이 기술적인 준비 없이 경수로를 짓고 있다"며 우려를 표명
- VOA는 "전문가들은 북한 핵시설이 IAEA의 관리를 받지 않아 핵 사고를 파악하기도 해결하기도 어렵다고 지적하고 있다"고 전함.
- 이에 김성환 외교통상부 장관은 3월 말 중국의 양제츠 외교부장을 만나 북한 영변 핵시설의 안전 문제를 언급하며 한중 양국의 대책 마련을 제안했다고 알려짐.

● "리비아 北대사관 나토 공습으로 큰 피해"(5/12, 자나통신, 알-자마히리아TV)

- 리비아 수도 트리폴리에 주재한 북한 대사관이 나토(북대서양 조약기구, NATO)군의 공습으로 큰 피해를 봤다고 리비아 JANA 통신이 북한 대사관 측이 리비아 외무부에 전달한 성명을 인용해 보도
- 북한 대사관 측은 이 성명에서 나토군의 "아만적이고 무차별적인 공습으로 미사일 파편으로 인해 대사관 건물이 손상됐다"고 밝혔다고 통신은 전함.
- 북한 외교관은 지난 9일과 10일 사이에 북한 대사관 가까운 곳에 미사일이 떨어져 폭발했다고 말했으며, JANA 통신은 북한 외교관 중에 부상자가 발생했는지 여부에 관해서는 언급하지 않음.
- 이에 북한 대사관 측은 나토에 대해 크루즈 미사일 공격이 대사관의 외교활동과 대사관원들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며 이의 중단을 촉구했으며, 나토의 이 같은 행동은 유엔 안보리 결의 1973호와 1970호를 위배하고 있다고 주장
- 알-자마히리아TV도 트리폴리의 군사 및 민간 시설에 대한 나토의 공습으로 북한 대사관에 큰 피해가 발생했다고 보도

■ 기타 (대외 일반)

- 美 '월 스트리트 저널'에 바르게 실린 '독도와 동해 명칭' 관련 日 정부의 항의에 대해 "조선재침, 영토팽창야욕에 사로잡혀 역사자료와 사실들을 강짜로 부인, 왜곡하는 등 비열하고 악랄한 책동을 다하고 있다" 고 비난(5/11, 중통·중방·노동신문)

3. 대남정세

● 北 "백두산 토론회, 전할 사항 없다"(5/9, 연합뉴스)

- 북한은 9일 우리 측이 제의한 11~13일 백두산 화산 학술토론회에 대해



- "(남측에) 전할 사항이 없다"는 반응을 보였다고 통일부가 밝힘.
- 북측은 통일부가 이날 오후 4시께 판문점 적십자채널 마감통화를 통해 "11~13일 백두산 화산 학술토론회와 관련해 전할 사항이 없느냐"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고 연합뉴스는 보도
- 이에 따라 남북 간 합의에 따라 우리 측이 11~13일 서울이나 평양에서 열자고 제안한 백두산 화산 전문가 학술토론회는 11일 개최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고 뉴스는 전함.
- 뉴스에 따르면, 통일부 당국자는 "현재로서는 11일 개최는 사실상 어렵다"면서 "북측에 학술토론회 개최를 다시 제안할 생각은 없으며 북측의 태도를 지켜보겠다"고 말함.

● "비핵화합의 맨 핵정상회의 김정일 초청"(5/10, 연합뉴스)

- 이명박 대통령은 9일 북한이 비핵화에 합의한다면 내년 3월 26~27일 서울에서 열리는 제2차 핵안보정상회의에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을 초청하겠다고 제안했다며 연합뉴스는 보도
-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베를린 시내 총리실에서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와 정상회담을 한 뒤 공동기자회견을 통해 "핵 포기 문제에 대해 북한이 진정하게, 확고하게 하겠다는 의견을 국제사회와 합의한다면 내년 3월 26~27일 핵안보정상회의에 김 위원장을 초대하겠다는 제안을 한다"며 "이 점에 대해 메르켈 총리와의 회담에서 이야기했다"고 밝힘.
- 이 대통령은 또 "이번 제안의 전제는 핵을 포기하겠다는 확고한 의지를 국제사회와 합의를 이룰 때"라며 "그 진정성의 전제는 북한이 테러에 대해 사과를 해야 한다는 것이다. 북한 사과 문제는 6자회담이라든가 여러 가지 남북문제의 기본"이라고 강조, 북한의 천안함·연평도 사태에 대한 사과도 핵안보정상회의 초청의 전제조건임을 분명히 밝힘.
- 이 대통령이 직접 대북 제안을 함으로써 남북 비핵화 회담의 계기를 만들어 남북관계 전환의 물꼬를 트고 남북정상회담의 여건을 조성하는 한편, 북핵 6자회담 재개의 전기도 주도적으로 마련하겠다는 의도가 내재돼 있다는 관측
- 그러나 이 대통령이 비핵화 합의와 함께 천안함·연평도 사태에 대한 사과를 핵안보정상회의 초청의 전제조건으로 내건 만큼 북한이 이를 수용할 가능성은 높지 않다는 전망
- 이날 이 대통령의 제안과 관련,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현재 제안한 남북 비핵화 회담을 통해 북한이 비핵화에 대한 생각을 밝히는 게 중요하고 6자회담을 통해 그랜드바겐 성격의 로드맵에 합의한다는 것을 뜻 한다"고 설명
- 또한 비핵화 합의의 조건에 대해서는 "북한이 전체 핵프로그램을 언제까지 폐기하겠다는 확고한 의지, 이에 대한 국제사회의 확인과 같은 대략적 접근이 이야기하는 것이 (이번 제안에) 더 가깝다"면서 "9.19 공동성명에는 핵 프로그램 폐기 시점이 없었는데 이제는 시점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며 연합뉴스는 보도



- **환구시보 "전폭기 판매거부 보도는 이간책"(5/10, 환구시보)**
 - 공산당 기관지 인민일보사가 간행하는 환구시보(環球時報)는 10일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이 후진타오 중국 국가주석에게 전홍(殲轟)-7(JH-7) 전폭기를 달라고 했다가 거절당했다는 보도가 한국에서 나온 것을 '이간책'이라고 비판
 - 환구시보는 "북한 지도자 김정일이 작년 5월 방중 했을 때 페이바오(飛豹, JH-7의 별칭)를 포함한 첨단무기를 사게 해 달라고 요청했으나 거절당했다는 보도가 9일 한국에서 나왔다"고 전함.
 - 랴오닝성 사회과학원 남북연구센터의 뤼차오(呂超) 주임은 이 기사에서 "한국 언론 보도에 점점 많은 이간책이 숨어있다는 점을 경계해야 한다"며 "한반도 긴장상태가 계속되는 가운데 한국은 이간책을 사용해 북한을 고립시키고 중국과 북한 사이에 갈등을 일으키려 한다"고 주장

- **北 "농협해킹 수사결과는 천안함 같은 날조극"(5/10, 조선중앙통신)**
 - 농협 해킹이 북한 소행이라는 검찰 수사결과에 북한이 "천안호 사건과 같은 날조극"이라며 비난
 - 조선중앙통신에 따르면 북한 국방위원회 인민무력부는 10일 '남을 걸고드는 악습을 버려야 한다'는 제목의 대변인 담화를 통해 "'북의 소행설'은 황당무계한 근거와 그에 바탕을 둔 허황한 주장이며 천안호 침몰사건과 같은 날조극"이라고 주장
 - 담화는 "원래 사이버전은 주로 자기를 노출하지 않고 상대를 공격하기 위해 미국이 고안해낸 특수한 형태의 침략전쟁 방식"이라며 "역적패당이 미국 상전에게 물어보아도 (미국이) 사이버전에 대한 초보적 개념도 모르는 무지를 드러낸 것이라고 질책했을 것"이라고 강조
 - 이어 "역적패당은 '북의 소행설'을 퍼뜨려 뿌리째 흔들리고 있는 반공화국 대결정책을 유지하고 4·27보선을 전후해 여지없이 드러난 집권말기 위기를 수습하며 민족적 화해와 단합을 파탄시킨 책임에서 벗어나보려고 획책하고 있다"고 비난
 - 담화는 "역적패당은 남을 걸고드는 체질화된 악습을 버려야 하며 전면봉괴에 직면한 제 집안 처지도 모르고 그 누구의 '급변사태'를 바라며 벌이는 전쟁연습 소동이나 당장 걷어치워야 한다"고 덧붙임.

- **통일부, 北 날조극주장에 "사이버테러 중단해야"(5/11, 연합뉴스)**
 - 통일부는 11일 "북한이 농협 해킹사건에 대해 날조극 등의 주장을 할 것이 아니라 사이버테러 행위를 즉각 중단할 것을 다시 한 번 촉구한다"고 밝힘.
 - 이종주 통일부 부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농협 해킹이 북한의 소행이라는 검찰 수사결과와 관련해 북측이 전날 "천안호(함) 사건과 같은 날조극"이라고 주장한 데 대해 이같이 말함.
 - 이 부대변인은 "검찰이 충분한 조사와 필요한 절차를 거쳐서 농협 전산망 해킹사건은 북한이 장기간 치밀하게 준비해서 실행한 것으로 보인다"는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면서 "이 문제에 대한 정부 입장은 전혀 변함이 없다"고 강조

- 또한 정부는 3일 통일부 대변인 논평을 통해 "북한이 그간 우리 동서해역에서 반복해 시도해 온 GPS(위성위치정보시스템) 교란행위나 이번 민간 금융기관 전산망 해킹 등의 행위는 우리 사회에 대한 도발이며 규탄 받아 마땅하다"면서 "북한이 이러한 무분별한 사이버테러 행위를 즉각 중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힌 적이 있다고 연합뉴스는 전함.

● **조선신보 "李대통령 베를린 제의엔 불순한 기도"(5/11, 조선신보)**

- 북한의 입장을 대변하는 재일본조선인총연합회(조총련) 기관지 조선신보는 11일 "이명박 대통령이 '서울초대'라는 제안을 했는데 서로 차원이 다른 문제를 억지로 결부시키는 논법에는 불순한 기도가 엿 보인다"고 밝힘.
- 조선신보는 '핵정상회의 초대 - 공세에 밀린 청와대'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이명박 대통령은 북남이 자기 권한을 가지고 선차적으로 풀어나갈 수 있는 문제를 언급하지 않았다"며 "베를린회견은 결국 종전의 대결책을 슬그머니 접고 '6자회담 테두리 안에서의 북남대화'에 나서기 위한 명분 세우기에 불과하다는 지적이 나올만하다"고 주장
- 신문은 반면에 김정일 위원장이 최근 방북한 카터 전 미국 대통령을 통해 "언제든 만날 준비가 돼 있다"며 이 대통령에게 남북정상회담을 제안한 것에 의미를 부여
- 이어 "조선반도의 비핵화도 김일성 주석 유훈의 하나이고 조선의 영도자가 직접 유훈관철에 대한 철석의 의지를 전달한 것"이라며 "조선반도의 비핵화를 실현하는데 북남이 할 몫과 북미가 할 몫이 따로 있다. 중미의 책임과 역할도 따져야 할 것"이라고 주장
- 또 "베를린회견의 내용은 카터 전언"에 대한 직접적 회답이라고는 말할 수 없다. 남측은 소극성을 부리며 여전히 그 무엇이 풀려야 만날 수 있다는 식의 조건부 대화에 대해 말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천안함 사태와 연평도 포격도발에 대해 사과하지 않겠다는 뜻을 내비침.
- 이어 조선신보는 "이명박 대통령이 '서울회의 초대장'을 쓰는 역할만 하겠다는 것이 본의가 아니라면 카터 전 대통령의 '전언'의 내용을 다시금 새겨야 할 것"이라며 "북남의 현안을 허심탄회하게 논의해보자는 제안은 벌써 집권말기의 위기에 처한 대통령에게 귀도수정의 마지막 기회일 수 있다"고 강조함.

● **통일부 "北 '베를린제안' 비난 매우 유감"(5/12, 연합뉴스)**

- 통일부 당국자는 12일 북한이 전날 이명박 대통령의 '베를린 제안'을 강도 높게 비난한 데 대해 "매우 유감"이라면서 "이런 언행은 남북관계 발전에 도움이 안 된다"고 연합뉴스는 밝힘.
- 당국자는 이날 기자들에게 "국기원수의 말씀에 대해 북측이 직접적으로 역도 등의 표현을 쓰면서 비방중상을 했다"면서 "남북관계 발전을 위해서



는 북한의 진정성 있는 태도변화가 있어야 한다"고 말함.

● **北, 재보선결과 내세워 대북정책 전환 압박(5/12, 연합뉴스; 우리민족끼리; 노동신문)**

- 남북정상회담을 제안하며 대화를 촉구하는 북한이 연일 4·27재보선 결과를 '민심의 심판'이라고 강조하며 이명박 정부에 대한 압박강도를 높이고 있다며 연합뉴스가 보도
- 현 정부의 강경한 대북정책 고수가 선거 참패를 불러왔다는 논리를 거듭 선전함으로써 정책 전환을 재촉하기 위한 전략의 일환으로 보인다고 뉴스는 전함.
- 또한 일각에서는 북한이 4·27 재보선 이전부터 '여당필패론'을 내세우며 사실상 선거전에 영향을 미치려 했다는 점을 들어 내년 4월 총선과 12월 대선까지 겨냥한 선전·선동 전략이란 분석
- 대남선전 웹사이트 '우리민족끼리'는 12일 '과멸로 내닫는 한나라당'이라는 제목의 기사로 "4·27 재보선선거에서 한나라당 심판의지로 쌓이고 쌓인 남조선 민심의 분노는 한나라당에 준엄한 판결을 내렸고 도처에서 쏟아져 나오는 규탄과 조소의 목소리에 남조선집권세력은 얼이 나갈 지경"이라고 여권 전체를 맹비난
- 또한 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11일자에서 "남조선인민들의 북남관계 개선지향은 보수당국의 반공화국 대결정책에 대한 항거에서 뚜렷이 입증되고 있다"며 "4·27재보선에서 보수집권세력이 참패한 것은 남조선의 절대다수 인민이 당국의 반공화국 대결정책을 견결히 반대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고 주장
- 조선중앙통신은 강원도지사 선거에서 한나라당이 패한 점을 내세우면서 '금강산 관광 중단'으로 인해 강원도 주민들이 고통을 받았고 결국 선거에 실패했다는 논리로 금강산 관광 재개도 간접적으로 촉구
- 김용현 동국대 교수에 의하면 "교착국면의 남북관계에서 이명박 정부의 정책 전환을 압박하기 위한 것"이라며 "남남갈등'을 조장하는 측면도 있는데 우리 국민에게는 의도한 효과를 거둘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고 북한 주민들에게는 결속을 도모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고 연합뉴스는 전달

● **北 "농협해킹 모략극" 진상공개장 또 발표(5/15, 조선중앙통신)**

- 북한 국방위원회 검열단이 농협 해킹을 북한의 소행으로 판단한 검찰 수사결과에 대해 '모략극'이라고 강조하는 진상공개장을 내렸다고 조선중앙통신이 밝힘.
- 진상공개장은 농협 해킹에 대한 검찰 수사결과를 반박하면서 "농협 금융 컴퓨터망 마비사태는 천안호 사건의 재판"이라며 "천안호 사건과 연평도 포격전, 농협 사태를 비롯한 모략극을 날조해 우리와 연계시키는 것은 북남대결을 추구하는 것"이라고 강조
- 이어 "공화국의 자주적 존엄과 사회주의 체제를 우롱하고 모독하는 자들과는 그가 누구든 절대로 상종하지 않는다는 것이 우리 군대와 인민의 단



호한 입장"이라며 "역적패당이 살길을 찾는 최선의 방도는 지금이라도 모략극, 날조극의 진상을 밝히고 솔직히 반성하는 것" 강조

- 진상공개장은 "이명박 역도는 베를린 행각 때도 부끄러운 줄 모르고 주제넘은 악담질을 했다"는 등의 표현을 사용하며 강도 높게 비난하며, "괴뢰들이 들고 나오는 '선 사과 후 대화설'은 본질에 있어 대결 고수, 대화거부 주장에 지나지 않는다"며 친안함 사태와 연평도 포격에 대해 사과할 의향이 없음을 재확인함.

■ 기타 (대남)

- 7월 韓美합동군사연습(백령도) 실시 예정 관련 '기습타격을 노린 침략전쟁기도의 발로'라고 주장하며 "정전협정에 대한 난폭한 유린, 노골적 침범행위로 된다"고 비난(5/8, 중통·노동신문)
- 南 <4.27 재보선> 선거결과를 "보수세력의 반인민적 악정에 대한 인민들의 심판"이라고 持續 왜곡하며 "진보세력의 연대·연합을 통해 내년 大選과 總選에서 반역정치를 끝장내자"고 선동(5/9, 중통·노동신문)
- △美 핵잠수함 '미시건호'의 부산항 입항, △백령도와 연평도 일대 해상사격훈련을 "대화분위기 조성을 방해하는 엄중한 도발"로 비난하며 "南당국이 대화를 거부하고 대결과 전쟁의 길로 나간다면 우리도(北) 단호히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위협(5/9, 중통·노동신문)
- <5.10 單選> 63주년 관련 "미국의 침략정책의 산물"이라며 "미국의 反北정책과 보수패당의 외세의존, 동족대결책동을 짓부셔버리기 위한 투쟁에 떨쳐나서야 한다"고 선동(5/10, 중통·민주조선)
- 南 진보단체들의 反정부 시위를 "파쇼독재 청산, 자유와 권리, 남북 관계 개선과 평화통일을 바라는 민심의 반영"이라고 持續 왜곡, 선동(5/12, 중통·민주조선)

● 북한연구센터 제공



II. 동북아정세

1. 대북한 관련

가. 북핵 문제 및 6자회담

● **李대통령"비핵화합의 땀 핵정상회의 北초청"(5/9)**

- 이명박 대통령은 9일 북한이 비핵화에 합의한다면 내년 봄 서울에서 열리는 제2차 핵안보정상회의에 초청할 수 있다고 제안했음.
-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베를린 시내 총리실에서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와 회담을 가진 뒤 공동기자회견을 통해 "북한이 국제사회와 비핵화에 대해 확고히 합의한다면 50여 개국 정상들이 참석하는 제2차 핵안보정상회의에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을 초청할 용의가 있다"고 말했음. 이 대통령은 이어 "그렇게 된다면 북한이 밝은 미래를 보장받을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밝혔음.
- 청와대는 이 대통령의 이 같은 입장에 대해 미국 백악관과도 이미 협의한 것으로 알려졌음. 제1차 핵안보정상회의는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의 주도로 지난해 4월 워싱턴에서 열렸으며 2차 정상회의는 내년 봄 서울에서 열릴 예정임.
- 이 대통령은 지난해 4월 워싱턴에서 2차 핵안보정상회의 유치 관련 기자회견 당시 김 위원장 초청 가능성을 묻는 기자의 질문에 "북한이 2010년과 2011년, 2년 동안에 6자회담을 통해 핵을 포기하는 확실한 의지를 보이고, NPT(핵비확산조약)에 가입해서 세계(에서) 합의된 사항을 따르게 된다면 저는 기꺼이 초대를 하게 될 것"이라고 밝힌 바 있음.
- 이 대통령의 이 같은 제안은 천안함, 연평도 사태로 긴장국면에 빠져있는 남북관계를 전환하기 위해 마련됐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음.
- 정부가 지난 1월 통일부 대변인 논평을 통해 천안함·연평도와 북한 비핵화 문제를 위한 당국 간 회담을 제안했지만 아직까지 북한은 이에 대해 호응하지 않고 있음. 이 대통령이 직접 대북 제안을 함으로써 남북 비핵화 회담의 계기를 만들어 남북관계 전환의 물꼬를 트고 남북정상회담의 여건을 조성하는 한편, 북핵 6자회담 재개의 전기도 주도적으로 마련하겠다는 의도가 내재돼 있다는 관측임.
- 더 나아가 이 대통령이 지난 2009년 10월 미국 뉴욕에서 제시했던 '그랜드 바겐(Grand Bargain)' 구상과도 연결될 수 있는 것으로 해석됨. 그랜드 바겐은 6자회담을 통해 북핵 프로그램의 핵심 부분을 폐기하면서 동시에 북한에게 확실한 안전보장을 제공하고 국제지원을 본격화하는 일괄 타결 방안임.
- 이 대통령은 그랜드 바겐과 관련해 미국, 일본 등 6자회담 당사국들과



- 협의를 벌였으나 북한이 호응하지 않았고 2010년 3월 북한의 천안함 폭침, 11월 연평도 포격 도발 사건이 발생하면서 진전을 보지 못했음.
- 이날 이 대통령의 제안과 관련,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현재 제안한 남북 비핵화 회담을 통해 북한이 비핵화에 대한 생각을 밝히는 게 중요하고 6자회담을 통해 그랜드 바겐 성격의 로드맵에 합의한다는 것을 뜻한다"고 설명했다.
 - 이 관계자는 "이렇게 되면 국제사회가 북한 비핵화 시한에 따라 어떤 경제지원, 안전보장, 신뢰회복 조치를 할지 계획이 수립될 수 있다"며 "북한이 염려하는 안전보장, 경제회복이 함께 해결되므로 그런 맥락에서 이 대통령이 '북한의 밝은 미래'라고 언급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 비핵화 합의의 조건에 대해서는 "북한이 전체 핵프로그램을 언제까지 폐기하겠다는 확고한 의지, 이에 대한 국제사회의 확인과 같은 대략적 접근이 이야기하는 것이 (이번 제안에) 더 가깝다"면서 "9.19 공동성명에는 핵 프로그램 폐기 시점이 없었는데 이제는 시점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 이어 "IAEA(국제원자력기구) 사찰단의 복귀까지는 아니더라도 사찰을 수용한다는 것이 긍정적 신호라고 볼 수 있고, 유엔안보리 결의 위반이라고 재규정하는 게 가장 정확하고 빠른 방법"이라면서 "북한이 UEP(우리농축축프로그램) 위반을 인정하고 중단·폐기하는 것을 전제로 6자회담에 나오겠다고 하면 중간에 안보리 절차와 과정은 생략될 수 있다"고 밝혔다.
 - 그는 또 "북한이 비핵화를 약속한다면 도발에 대한 사과도 할 수 있을 것"이라며 "(북한이 비핵화에 합의하기 전에) 우리가 사과를 분명히 요구하게 될 것이다. 사과가 돼야 남북한이 신뢰를 갖고 경제협력을 할 수 있다는 생각"이라고 강조했다.

● 한일 6자 수석 회동..북핵·정상회의 준비 논의(5/11)

- 북핵 6자회담의 한국 수석대표인 위성락 외교통상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과 일본 수석대표인 스기야마 신스케(杉山晋輔) 외무성 아시아·대양주 국장이 11일 회동함.
- 위 본부장과 스기야마 국장은 이날 오전 서울 도림동 외교부 청사에서 만나 한반도 정세를 평가하고 북한의 우리농축축프로그램(UEP) 대응책과 6자회담 재개 여건 조성 방안 등을 논의할 예정임. 이날 회동은 특히 남북 비핵화 회담을 시작으로 하는 '6자회담 3단계 재개방안'에 대한 양측의 공감대를 확인하는 자리가 될 것으로 예상됨.
- 스기야마 국장은 이어 장원삼 외교부 동북아국장과 오찬을 함께 하면서 오는 21~22일 도쿄에서 열리는 한·중·일 정상회의의 준비 상황을 점검함. 이 자리에서는 원자력 안전 협력, 조선왕실의궤 반환 등의 현안도 논의될 것으로 보임.
- 스기야마 국장은 이기철 외교부 국제법률국장과의 만나 독도 문제 등에 대한 의견을 교환하고 이날 본국으로 돌아감.



● 美 "남북한 대화, 北에 중요한 기회"(5/11)

- 미국 정부는 북한이 비핵화에 합의할 경우 내년 서울 핵안보정상회의에 김정일 국방위원장을 초청하겠다는 이명박 대통령의 제안에 대해 남북한 대화가 북한에 중요한 기회가 될 수 있다고 10일 밝혔다.
- 마크 토너 국무부 부대변인은 이날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어떤 일이 일어날지 선불리 예측하지 않겠다"면서 "그러나 우리의 일관된 입장은 남북한 간 대화가 북한에 있어 진정성을 보이고 관계개선을 위한 행동을 취할 중요한 기회라는 것"이라고 말했다.
- 그는 또 "이 대통령의 제안과 관련 언론보도 등을 봤다"면서 "그렇지만 우리는 여전히 북한이 호전적인 행태를 바꾸겠다는 의지를 확실하게 보여주기를 원한다"고 강조했다.
- 토너 부대변인은 이어 최근 김정일 위원장이 방북한 지미 카터 전 미국 대통령 일행을 통해 대화 재개 메시지를 보낸 데 이어 이 대통령이 남북 대화 가능성을 언급한 것이 대화 분위기의 진전을 보여주는 것이냐는 질문에 "그것은 한국 정부에 물어봐야 할 것"이라며 말을 아꼈음.
- 그는 그러면서 이 대통령의 제안과 관련한 한·미 간 협의 여부에 대해 "물론 우리는 동맹인 한국과 늘 긴밀하게 협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 이 같은 언급은 전날 미 행정부 고위 당국자가 연합뉴스에 "서울 핵안보정상회의에서 북한을 초청하는 문제는 한국의 결정사항"이라고 전제한 뒤 "국제사회는 내년 서울 핵 안보정상회 때까지 북한의 행동 추이를 지켜보고 판단해야 한다"고 밝힌 것과 같은 맥락으로 해석됨.
- 토너 부대변인은 이밖에 이날 폐막한 제3차 미·중 전략경제대화와 관련해 "분명히 북한 문제가 주제가 됐을 것"이라고 밝혔으나 "구체적인 내용은 모른다"고 덧붙였음.

● 클린턴 "北도발·핵개발 막기 위한 中협력에 초점"(5/12)

- 힐러리 클린턴 미국 국무장관은 11일 북한의 핵개발과 추가 도발을 막기 위한 중국과의 협력을 강조했다. 클린턴 장관은 이날 중국 경제지 차이신(財新)과의 인터뷰에서 북한, 이란 문제와 관련한 중국의 협력에 만족하느냐는 질문에 "우리는 특히 북한의 추가적인 도발과 핵개발을 막기 위해 중국과의 협력에 초점을 두고 있다"고 밝혔다.
- 그는 "이것(북한의 추가적 도발과 핵개발)은 극히 위험한 것"이라면서 "그래서 우리는 열심히 노력하고, 같은 목표를 위해 일하고 있다. 우리는 함께 진전을 만들어내야 한다"고 말했다.
- 그는 워싱턴에서 열린 제3차 미·중 전략경제대화에서 북한과 이란 문제가 심각한 문제이기 때문에 이 두 문제 모두를 "길게" 논의했다고 소개했음.
- 그는 "우리는 한반도나 중동에서 핵무기 확산을 보길 원하지 않는다"면서 "중국이 유엔에서 이들 두 국가에 대한 제재를 가하는데 미국과 함께 한데 대해 감사하고 있으며, 우리는 제재들을 이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 그는 "항상 더 행해져야 할 일이 있지만, 우리는 함께 진전을 이뤘다"고 덧붙였음.

● **李대통령 "北 반응, 여러 가지로 해석해야"(5/12)**

- 이명박 대통령은 12일 핵을 포기하면 내년 서울 핵안보정상회의에 김정일 국방위원장을 초청하겠다는 제안을 북한 대남기구인 조국평화통일위원회가 사실상 거부한 것과 관련, "여러 가지로 해석해야 한다"고 말했다.
- 덴마크를 국빈방문중인 이 대통령은 이날 코펜하겐 시내 총리실에서 열린 라스 뢰게 라스무스 덴마크 총리와의 공동기자회견에서 "(제안에 대한 북한의) 소식은 없었다. 소식이 빨리 오리라고 기대하지 않았다"며 이같이 말했다.
- 이 대통령은 이어 "어떤 반응이라도 그대로 받아들일 필요가 없다"며 "부정적으로 나왔다고 해서 부정적인 것도 아니다"라고 지적했음. 이는 북한 조평통이 대변인 문답을 통해 이 대통령의 제안을 사실상 거부했지만 대남 선전기구의 반응인 만큼 아직까지는 북한의 공식 입장으로 보지 않는다는 뜻으로 해석됨.
- 이와 관련, 청와대 관계자도 코펜하겐의 한 호텔에서 기자들과 만나 "우리가 새롭게 제시한 화두이고 핵안보회의까지 시간도 많이 남은 만큼 향후 북한과 소통할 기회가 있을 것으로 본다"며 "북한은 우리가 제안한 내용을 아주 구체적으로는 잘 알지 못하는 상황일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 이번 제안과 관련한 남북 실무접촉 가능성에 대해서는 "실무적 접촉이 있지 않겠느냐"면서 "북한에 공식 입장이 전달된 바 없는 만큼 향후 어떤 식으로든 북한과 소통할 기회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 그는 "어떤 식으로든 우리가 이를 제안한 배경 등에 대해 의견을 나눌 기회가 있을 것이다. 실무적 접촉이 있을 수 있다"면서 "구체적 소통 방식은 한국에 돌아가서 관계부처와 얘기할 부분"이라고 설명했다.
- 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 10일 독일 베를린에서 북한이 비핵화의 의지를 입증하면 핵안보정상회의에 김정일 위원장을 초청하겠다고 제안했지만, 북한의 대남 기구인 조국평화통일위원회는 11일 이 대통령을 '역도'로 지칭하면서 "핵 포기를 대화의 전제조건으로 내세우는 것 역시 우리를 무장해제 시키고 미국과 함께 북침야망을 실현해보려는 가소로운 망동"이라고 비난했음.

● **<움직이는 미국..대화국면 진전될까>(5/15)**

- 스티븐 보즈워스 미 대북정책 특별대표 일행의 16일 방한을 계기로 한반도 정세흐름에 새로운 물꼬가 트일지 주목됨. 6자회담 재개의 첫 단추로 지목된 남북 비핵화 회담이 답보국면을 보이는 와중에 미국의 대북협상팀이 서울을 찾는 것이어서 상황변화를 촉진할 모멘텀이 창출되지 않겠느냐는 기대감이 나옴.



- 보즈워스 대표의 이번 방한은 일단 한반도 정세운용에 대한 한·미의 대북 정책 조율이 긴밀하게 작동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음. 서울(남북 회담)→워싱턴(북미회담)→베이징(6자회담)으로 이어지는 3단계 재개안이 '확립된 프로세스'로 부상한 가운데 양국의 북핵협상 라인이 대응 행보를 조율하는 계기이기 때문임.
- 외교가가 보다 의미 있게 보는 대목은 이번 방한이 큰 틀에서 볼 때 미·중의 '전략적 컨센서스' 속에서 이뤄지고 있는 측면임. 중국이 지난 달 말 우다웨이(武大偉) 한반도사무 특별대표의 방한을 통해 남북 비핵화 회담을 시발로 한 '3단계 접근안'에 시동을 걸었고, 이어 미국이 대북 협상팀을 한국에 보내 그 흐름을 계속 살리려는 모양새로 볼 수 있기 때문임.
- 여기에는 지난 11일 폐막한 전략경제대화에서 미·중 양국이 재확인한 올 1월 워싱턴 공동성명이 자리하고 있다는 분석임. 한반도 상황관리와 대화국면 전환을 향해 G2(주요 2개국) 차원의 전략적 협력 틀이 가동되고 있다는 의미임.
- 주목할 점은 보즈워스 대표가 현 시점에서 어떤 메시지를 들고오느냐임. 현 국면은 중국 우다웨이 대표의 방한 이후 우리 정부가 남북 비핵화 회담에 대한 북측 반응을 기다리고 있는 가운데 남북 간에 기싸움이 전개되는 상황임.
- 이명박 대통령은 최근 독일 베를린에서 천안함·연평도 사과를 거듭 촉구한데 이어 비핵화 합의시 내년 서울 핵안보정상회의에 김정일 국방위원장 초청한다는 제안을 던지며 북한의 비핵화를 '압박'했다. 이에 북한은 "북침야망을 실현해보려는 가소로운 망동"이라고 일축하며 다시금 대남 비난전을 전개하고 있음.
- 이 같은 공방 속에서 당초 조기 개최 가능성이 점쳐졌던 남북 비핵화 회담은 난기류에 봉착하는 듯 한 분위기임. 모처럼 조성된 대화의 모델팀이 약화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북핵 외교가에서 제기되고 있음.
- 이런 맥락 속에서 보즈워스 대표의 이번 방한은 대화재개 흐름에 다시금 강한 추동력을 불어넣으려는 전략적 행보의 성격이 강하다고 볼 수 있음.
- 따라서 미국은 이번 방한을 통해 '공'을 넘겨받은 북측이 조속히 비핵화 회담에 반응을 보이도록 촉구하는 메시지를 발신할 것으로 예상됨.
- 북한이 남북대화에 나와 비핵화와 관련한 전향적 태도를 보여주지 않는 한 북미대화와 6자회담 재개가 어렵다는게 그 핵심이 될 가능성이 있음. 공통의 전략적 목표를 재확인한 한·미 양국으로서는 남북대화와 북미대화를 병행하며 북한 비핵화를 이끌어내기 위한 '역할분담' 방안을 조율할 것으로 예상됨.
- 그러나 '대화파'인 보즈워스 대표의 방한은 한편으로 우리 정부에게도 전략적 유연성을 주문하는 의미도 담고 있다는 분석이 나옴. 모처럼 조성된 대화의 동력을 잃지 않으려면 한·미 양국으로서는 원칙론을 견지하는 가운데 북한이 일단 비핵화 회담의 장에 나올 수 있도록 전략적으



- 로 보폭을 조율할 필요성이 있기 때문이다.
- 특히 천안함·연평도 문제와 비핵화회담 분리 여부에 대해 어떤 입장이 정리될 지가 관전포인트임. 미국은 천안함·연평도 문제를 비핵화 트랙과 직결시키지 않고 있으나 우리 정부는 여전히 "서로 영향을 주는 관계"라며 모호한 연계성을 유지하고 있음. 이명박 대통령이 베를린에서 천안함·연평도 사과를 재차 강조하면서 그 연계성은 더욱 강해지고 있다는 관측임.
 - 이번 보즈워스 대표 방한의 또 다른 관전 포인트는 미국의 대북 식량지원에 대한 사전조율임. 미국은 대북식량계획(WFP) 보고서 발표 이후 대북 식량지원 자체가 불가피하다고 보면서도 정확한 수요평가와 모니터링 시스템 확보 등 전제조건을 내세우며 일정하게 '속도조절'을 꾀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음.
 - 이는 드러내놓지는 않지만 대북 식량지원을 대화국면 진전과 연계해 '지렛대'로 활용하려는 포석을 깔고 있다는 게 외교가의 시각임. 이런 맥락 속에서 한·미 양국은 대북식량 지원의 규모와 시기, 모니터링 시스템 확보방안에 대해 심도 있는 의견을 조율할 것으로 예상됨.
 - 이렇게 볼 때 보즈워스 대표의 방한은 이달 하순으로 예상되는 로버트 킹 대북 인권특사의 방북을 앞둔 '예비수순'이기도 함. 킹 특사는 미국 국제개발처(USAID) 및 국무부 요원들로 구성된 미국 식량지원 평가단과 함께 방북할 것으로 예상됨.
 - 이런 분위기 속에서 남북 비핵화 회담 제안에 무반응으로 일관하고 있는 북한으로서는 보즈워스 대표의 방한과 로버트 킹 특사의 방북 등을 통해 전달될 미국의 메시지에 주목하며 상황을 일단 관망할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임.
 - 당장 비핵화 회담에 나서는 것은 미국 등으로부터 뚜렷한 대가를 보장받지 못하는 상황에서 우리 정부의 '비핵화 전제조건' 요구에 부딪힐 수밖에 없어 전략적 실익이 없다고 판단할 가능성이 큼. 그렇다고 춘궁기 식량난이 발등의 불로 떨어진 상황에서 과거와 같이 도발이나 긴장고조 행위에 나서는 것 역시 여의치 않은 실정임.

나. 미·북 관계

● "3월 북미교역 74만 달러...모두 구호물품"(5/12)

- 지난 3월 미국과 북한 사이의 교역액은 약 74만 달러(한화 8억여원)로 모두 미국에서 북한으로 보내는 구호물품이었다고 미국 자유아시아방송(RFA)이 12일 보도했음.
- RFA는 미국 상무부 보고서를 인용해 "올해 들어 북미 간 교역은 3월에 처음 있었고 총 교역액 73만7천 달러가 미국 측의 구호물자였다"고 전했다.
- 미 상무부는 메릴랜드주의 볼티모어와 워싱턴주 시애틀에서 각각 7만 달러어치와 66만7천 달러어치의 구호물자가 북한으로 떠났다고 밝혔지만



출항 날짜와 구체적 품목은 확인되지 않았다고 RFA는 설명했다.

- RFA에 따르면 올해 3월의 북미 간 교역액은 지난해 3월의 28만 달러와 비교해 2.6배로 늘었으며 작년의 경우엔 구호물자가 아닌 열매가 달리는 관목이 주로 북한에 수출됐음.

다. 중·북 관계

● <北-中 '경협 통로' 구축 가속화>(5/9)

- 북한과 중국이 양국 '경제협력 통로' 확보에 속도를 내기 시작했다. 두만강 교역 창구인 중국 훈춘(琿春)과 북한 라진을 잇는 도로 보수 공사를 시작하기로 한데 이어 압록강 유역 최대 무역 거점인 신의주와 단둥을 연결하는 신압록강대교 건설도 본궤도에 올랐음.
- 북-중은 이달 말 훈춘-라진 도로보수 공사 착공식을 하고 내달부터 본격적인 공사에 나서기로 했으며 신압록강대교 건설을 위한 정박지 공사도 이달 초 시작됐음.
- 훈춘-라진 도로 보수는 중국이 공을 들이는 두만강 유역의 동해 항로 확보와 양국이 협력개발기로 한 라선특구 개발의 교두보라는 점에서 북-중 경협이 새로운 단계로 들어섰음을 의미함.
- 신압록강대교 역시 북-중 교역의 70%를 차지하는 신의주와 단둥의 교역량을 대폭 늘릴 수 있게 된다는 점에서 양국 교역 확대의 전기가 마련될 것으로 여겨지고 있음. 중국은 장차 신압록강대교를 거쳐 평양까지 진출하고 더 나아가 장래에는 서울과도 잇는 한반도 연결의 대동맥으로 삼겠다는 구상도 세워두고 있음.
- 양국은 이들 경협 통로 이외에도 투먼(圖門)-남양을 비롯해 두만강과 압록강 유역에 3-4곳의 다리를 추가 건설하고 도로와 철도를 정비해 교역 확대를 꾀할 계획임.
- 북-중 교역의 대표적인 창구인 압록강과 두만강을 잇는 경협 통로 개척이 본격화되면서 양국 간 경제 협력 행보도 한층 빨라질 것으로 보임. 우선 훈춘-라진 도로 보수가 끝나면 중국은 부두 사용권을 확보하고도 비포장도로여서 운송력이 떨어지는 기존 도로 때문에 이용하지 못하는 라진항을 이용한 화물의 남방 운송을 본격화할 수 있음.
- 또 무산 등 훈춘과 인접한 북한의 석탄과 철광 등 풍부한 지하자원 협력 개발에도 적극적으로 나설 것으로 보임. 이미 양국은 북한의 주요 지하자원 협력 개발에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 중국은 더 나아가 투먼 국제경제무역지대 건설 등 북한을 끌어들이며 두만강 유역을 동북아시아 무역 거점으로 육성하겠다는 구상의 실현에도 의욕을 보일 전망이다.
- 신압록강대교 건설을 계기로 북한의 황금평가 위화도 등 압록강 섬들에 대한 북-중 협력 개발도 속도를 낼 가능성이 큼. 북한은 불온사상 유입 등을 우려해 신압록강대교 건설에는 소극적이지만 개성공단을 대체할 외화벌이 창구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황금평 개발에 의욕을 보여왔음.



- 2009년 10월 원자바오(溫家寶) 중국 총리의 방북 당시 건설에 합의하고도 이런저런 이유로 다리 건설에 적극성을 보이지 않았던 북한이 신압록강대교 건설에 응한 것은 황금평 합작개발을 고리로 한 중국의 설득 때문으로 보임.
- 따라서 중국 역시 북한의 황금평 개발 요구를 적극적으로 수용했을 가능성이 높음. 이미 중국의 일부 국영기업들이 황금평 개발에 참여하기로 했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음.

● "北-中, 28일 황금평 합작개발 착공식"(5/10)

- 북한과 중국이 압록강 하류의 섬 황금평 합작개발 착공식을 이달 28일 열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황금평 개발을 맡은 중국 랴오닝(遼寧)성은 이미 전담팀을 구성, 북한과 구체적인 개발 방안을 논의 중인 것으로 전해졌음.
- 10일 단둥(丹東)의 소식통들에 따르면 북-중 양국은 중앙 고위급 인사가 참석한 가운데 오는 28일 착공식을 하고 황금평 개발을 위한 기반 조성 공사에 착수할 계획임.
- 단둥의 한 소식통은 "북한에서는 장성택 노동당 행정부장이, 중국에서는 경제를 담당하는 왕치산(王岐山) 부총리가 참석할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이 자리에서 황금평을 중국에 임대하는 국가 간 협정도 체결될 것"이라고 전했다.
- 개발이 본격화되면서 랴오닝성은 지난달 황금평 개발 전담팀을 구성, 2차례에 걸쳐 북한 측과 설계 방안을 논의한 것으로 전해졌음. 양측은 황금평에 관광과 물류, 임가공단지 등을 건설하기로 합의했으나 개발 규모나 구체적인 입지 시설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고 단둥의 소식통들이 전했다.
- 압록강의 퇴적물이 쌓여 형성된 황금평은 11.45km² 규모로, 신의주 최대 곡창지대로 꼽히고 있으며 북한은 2009년 초부터 자유무역지구 개발을 추진해왔음.
- 북한 합영투자위원회와 중국 상무부는 지난해 12월 베이징에서 황금평 합작 개발을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했음. 임대 조건은 북한이 개발권을 중국에 50년 양도하고 50년을 추가 연장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 알려졌다.
- 북한은 투자자 유치를 위해 투자 자산과 수익을 보장해주는 내용 등을 담은 '황금평 특구법'도 지난해 마련했다고 북한을 방문했던 중국 학자들이 전했다.
- 중국은 단둥 랑터우(浪頭) 신도시 조성 완공 시점인 2015년을 전후해 황금평을 개발,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하겠다는 구상임. 이달 초 착공한 신압록강대교 완공 시기도 이때에 맞춰져 있음. 노후한 동북공업지역을 첨단산업단지로 개조하려는 '동북진흥책'의 하나로 랴오닝연해경제벨트 건설을 추진 중인 중국은 단둥 랑터우(浪頭) 신도시를 압록강 유역 최대의 물류·가공단지로 육성할 계획임.



● <北지재룡, 잇단 中고위층 면담 배경될까>(5/11)

- 지재룡 주중 북한대사의 잇단 중국 고위층 면담 행보에 베이징(北京) 외교가가 긴장하고 있음. 지 대사가 주재국 대사로서는 임기 중에 한 차례 만나기도 힘들다는 정치국 상무위원들을 잇따라 면담하고 국무원 부장(장관)급과 국무위원들을 일상사처럼 만나고 다니는 게 심상치 않다는 것임.
- 사실 최근 이입한 존 헨츠먼 주중 미국 대사는 재임기간에 단 한 번도 중국의 정치국 상무위원들을 독대한 적이 없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으며, 그와 비교하면 지 대사는 초특급 대우를 받고 있다는 지적임.
- 실제 지 대사는 지난달 28일 중국의 차기 최고지도자로 유력시되는 시진핑(習近平) 국가부주석을 예방했음. 앞서 지난 3월 25일과 지난달 7일에는 각각 권력서열 4, 5위인 자칭린(賈慶林) 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 주석과 리창춘(李長春) 당 정치국 상무위원을 만났음.
- 그 뿐만이 아님. 지난 9일에는 양광례(梁光烈) 국무위원 겸 국방부장을, 지난달 20일에는 멩젠주(孟建柱) 국무위원 겸 공안부장을 만났고, 그에 며칠 앞서 차우(蔡武) 문화부장과 장관급인 신화사의 리충권(李從軍) 사장, 공산당 기관지 인민일보의 장옌농(張研農) 사장을 접견했음.
- 이와 관련해 외교가에서는 북한과 중국 모두 함구하고 있어 그 배경을 알 수 없으나, 일단 북 중 관계가 크게 개선된 징후로 볼 수 있다고 분석하고 있음.
- 지 대사의 이런 행보를 북한의 2인자인 김정은 당 중앙군사위원회 부위원장의 방중을 앞둔 사전 준비 작업으로 해석하는 시각도 있음. 특히 지 대사가 중국 내 '선전' 일꾼의 총책임자들에 이어 경호 및 국방 사령탑을 만나고, 김정은의 중국 측 카운트파트 격인 시진핑 부주석을 예방한 점으로 미뤄 김정은 방중 임박설이 나오기도 함.
- 아울러 얼마 전에 북중 접경지역인 단둥(丹東)에 중국 민정부의 고위 당국자가 방문한 것으로 확인돼 김정은 방중 가능성이 점쳐지기도 했음. 그러나 김정은 또는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방중을 암시하는 직접적인 징후는 감지되지 않고 있다는 게 대체적인 판단임.
- 따라서 지 대사에 대한 중국의 초특급 대우 행보는 북중관계 강화에 초점이 맞춰진 것이라는 분석이 유력해 보임.
- 지난해 천안함과 연평도 사건으로 한반도가 극단적인 대치 상태로 치달아 '한국·미국·일본 대(對) 북한·중국' 대립 구도가 선명해지면서 북중관계 밀착으로 이어졌고, 이런 결과로 지 대사에 대한 중국의 대우가 눈에 띄게 달라졌다는 것임.
- 오는 7월 북중 우호협력조약 50주년 행사가 예정돼 있다는 점에서, 이와 관련한 북중 간 교류도 활발해 보임. 지 대사가 양광례 국방부장을 면담한 것도 이와 무관치 않다는 해석임.
- 이런 가운데 외교가에서는 북중 우호협력조약의 일부 내용의 개정 가능성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음. 이 조약에는 "제3국의 침략 등으로 북한에



전쟁상태가 발생할 경우 중국이 자동적으로 군사력을 개입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돼 있으나, 이는 사실상 사문화됐다는 게 일반적인 판단임. 그러나 지난해 천안함과 연평도 사건을 겪으면서 안보 불안을 느낀 북한이 문제의 개입 조항의 복원을 요구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음.

- 무엇보다 주목되는 점은 최근 몇 달 새 압록강 하류의 섬인 황금평과 북한 라진을 축으로 북중 간에 경제협력이 열기를 띠고 있다는 점임. 북중 양국이 황금평 합작개발 착공식을 이달 28일 열기로 했다고 전해지고 있음. 착공식에 북한의 장성택 노동당 행정부장이, 중국의 왕치산(王岐山) 부총리가 참석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옴.
- 크게 눈에 띄는 대목은 그동안 기업 자체적인 판단에 따른 대북 투자를 유도해왔던 중국 정부가 기업의 투자 손실을 보전해주려는 움직임을 보이는 등 정부가 개입해 북중 경협을 강화하려는 제스처를 보이고 있다는 점임. 중국 정부가 자국 기업의 대북 투자 손실을 보전하거나 정부 주도의 투자가 이뤄지면 북중 경협은 활기를 띠 것으로 예상됨.
- 베이징의 한 소식통은 "북중 관계의 특수성을 고려하더라도 중국의 지 대사 초특급 대우 행보는 예사롭지 않으며 이전보다 격상된 양국 관계를 보여주는 것 같다"고 해석했음.
- 이 소식통은 그러면서 "지 대사의 중국 고위층 접견 행보에 대해 중국 관영매체는 거의 보도하지 않는 반면 북한 관영 매체가 적극 보도하는 점도 눈에 띈다"며 "이로 볼 때 북중 관계 강화에 대한 북한의 의지가 더 큰 것으로 볼 수도 있다"고 지적했음.

● 中 상하이의 북한 단체관광 7월 재개(5/11)

- 중국 상하이에서 북한 단체관광이 천안함 사건으로 중단된 지 11개월 만인 오는 7월부터 재개됨. 동방조보(東方早報)의 11일 보도에 따르면 북한 전문 여행사인 상하이진뤼(上海錦旅)는 7월1일부터 고려항공 전세기를 이용해 금강산과 아리랑공연 등을 관람하는 4박5일의 북한 관광을 재개함.
- 이번에 재개되는 북한 관광의 항공편은 과거와 달리 베이징(北京)과 선양(瀋陽)을 경유하지 않는 직항편으로 북한까지 3시간이면 도착하게 돼 비행시간이 절반가량으로 줄어듦. 또 금강산 관광이 처음으로 중국인 관광객들에게 개방됨.
- 올해 북한 여행은 오는 11월31일까지 계속되며 매주 화요일과 금요일에 단체로 출발함. 이번 여행상품은 '평양-개성-금강산'과 '평양-개성-묘향산'의 2개 일정으로 나뉘어 운영되며 가격은 각각 6천260위안(105만원)과 5천999위안임.
- 상하이진뤼는 '신비의 나라 조선에서 외국 귀빈대우를 받으며 10만 명이 동원되는 아리랑 공연을 관람하는 자연생태 여행'이라는 문구를 내걸고 관광객 모집에 열을 올리고 있음.
- 상하이-북한 관광은 작년 4월부터 8월까지 재개되다 11월 천안함 사건이



터지면서 중단됐음. 그러나 작년 이 여행 상품을 이용해 북한을 관광한 중국인은 300명에 못 미치며 상하이진뤄가 여행객의 70%를 모집한 것으로 알려졌다.

- 상하이진뤄 관계자는 천안함 사태 이후 북한 여행을 재개하기 위해 여러 방면으로 노력했다면서 전세기를 이용해 비행시간이 단축되기 때문에 여행시간이 크게 늘어나게 된다고 말했다. 그는 기네스북에도 등재된 대규모 공연인 아리랑은 오는 8월1일부터 31일까지 한 달간 진행되기 때문에 이 기간 북한을 방문하는 관광객만 관람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 여행업계 인사는 내년은 북한에서 김일성 전 주석 탄생 100주년을 맞아 대형 공연들이 준비될 것이라고 전제하면서 북한을 여행할 때 휴대전화기는 평양공항 도착 후 맡겨놓아야 하며 캠코터와 카메라는 휴대할 수 있지만 방송용 캠코터나 망원경은 휴대할 수 없다고 소개했다.

● 남북교역 중단 후 北인력 中에 대거 유입(5/11)

- 천안함 사태에 따른 남북교역 중단 이후 북한의 봉제공들이 대거 중국으로 유입되고 있음. 11일 단둥(丹東) 소식통들에 따르면 최근 의류공장이 밀집해 있는 압록강 하류 동강(東港) 일대에 파견돼 일하는 북한의 봉제공이 1천여 명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됨.
- 한 소식통은 "예전에 400-500명에 불과했으나 남북교역 중단에 따라 한국 의류업체들의 위탁가공이 끊기면서 1년여 만에 배가량 급증했다"며 "북한 봉제공들은 외부와 전면 차단된 채 공장 내에서만 머물며 일하고 있다"고 말했다.
- 이 소식통은 "공장마다 수십 명씩 고용하고 있으며 규모가 큰 공장은 200-300명도 거느리고 있다"고 전했다.
- 이들에게는 평균 1천200-1천300 위안(20만-21만5천 원)의 월급이 책정됐으나 임금은 전액 북한 노무송출회사에 지급되고 있음. 이 가운데 북한 봉제공들에게 돌아가는 몫은 400-500 위안(6만6천-8만3천 원)에 불과하지만 북한 봉제공들 사이에 중국에 나오기 위한 경쟁이 치열한 것으로 알려졌다.
- 단둥의 한 의류업체 관계자는 "중국 근로자들은 힘든 일을 기피하고 이직도 잦다"며 "인력 확보에 어려움을 겪어온 중국 의류공장들이 북한 봉제공들을 선호하고 있다"고 말했다.
- 그는 "최근 급등한 중국 인건비의 50-70% 수준에 불과한 저임금도 매력이지만 한국 업체들과 오랫동안 교역하면서 수준 높은 기술을 갖췄고 밤샘 근무까지 군소리 없이 해내 효율성이 높다"고 덧붙였다.
- 최근에는 중국의 의류업체에 북한 봉제공들의 고용을 알선하는 중개업자들까지 등장했다.
- 이에 앞서 지난해 11월 연변(延邊)조선족자치주 훈춘(琿春)과 두먼(圖門) 의류업체들도 인력난 해소를 위해 1천600여 명의 북한 봉제공들을 고용하겠다고 중국 정부에 허가를 신청했다.
- 또 지난 1월에는 이기범 선양주재 북한총영사가 헤이룽장(黑龍江)성 무단



장(牡丹江)시를 방문, 2천여 명의 여성 근로자 고용을 요청하는 등 북한과 중국이 경제협력의 새로운 모델로 북한 근로자의 중국 송출을 적극 모색하고 있음.

2. 주변국 관련

가. 한·미 관계

● 美상원의원들, 주한미군 기지재배치 보류 주장(5/12)

- 미국 상원 군사위원회 소속 주요 의원 3명이 11일 주한미군 기지와 일본 후텐마 미군기지 이전 계획 등 동아시아 지역 미군기지 재편 계획의 재검토를 요구했음.
- 민주당 소속의 칼 레빈 상원 군사위원장과 같은 당 소속의 짐 웹 의원, 공화당 군사위 간사인 존 매케인 의원 등 3명은 이날 공동으로 발표한 성명을 통해 재정 문제 등을 거론하면서 현재의 동아시아 기지 재편 계획은 "현실적이지 않으며, 실현될 수 없고, 실행할 형편도 못 된다"면서 이같이 밝혔음.
- 이들은 "국방부는 미국이 계속적으로 그 지역에 굳게 주둔할 것이라는 확신을 일본, 한국 및 다른 국가들에 주는 가운데 동아시아의 미군 재조정 계획을 재검토해야 한다"고 말했음.
- 의원들은 우선 그동안 논란이 돼 왔던 일본 후텐마 기지 이전 문제와 관련, 캠프 슈와브에 새로운 기지를 건설하는 대신 이미 있는 가네다 공군기지로 옮겨가는 방안을 검토하고, 후텐마 해병대 병력 괄 배치 계획의 재검토도 권고했음.
- 또 주한미군 기지 문제와 관련, "한국 내 미군기지 재편을 추가적인 검토가 이뤄질 때까지 연기해야 한다"면서 "미군과 동반하는 가족들 확충 계획도 재평가해야 한다"고 제안했음.
- 레빈 위원장은 후텐마 기지 이전 문제와 관련, "지난 2006년 미·일 간에 기지이전이행 로드맵 합의가 있는 뒤 많은 것이 변화했다"면서 이전 시기가 비현실적이고 비용도 크게 증가해서 현재의 재정 상황에서 감당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음.
- 그는 후텐마 기지 이전 계획은 지난 3월 대지진과 쓰나미 피해가 난 일본에 막대한 재정적 부담도 안길 수 있다고 지적했음.
- 매케인 의원은 "아태지역의 증가하는 역할은 우리로 하여금 끊임없이 역내 미군의 역할에 대한 재검토와 업데이트를 하도록 요구하고 있다"고 말했음.
- 웹 의원은 "동아시아에서의 미군 역할을 재정립하는 문제에 있어 중요한 시기에 도달했다"면서 "이 시기는 우리의 doktrin을 명확히 하도록 요구하고 있고, 그래서 한국, 일본, 괄 등 역내의 미군 태세를 재정립해야 한다"고 말했음.



● 美, 보즈워스 16일 방한 공식 발표(5/14)

- 미국 국무부는 스티븐 보즈워스 대북정책 특별대표가 오는 16일부터 18일까지 한국을 방문한다고 13일 공식 발표했다.
- 국무부는 보즈워스 대표가 한국 방문 기회에 천영우 청와대 외교안보수석, 현인택 통일부 장관, 위성락 외교통상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 등을 만나 한반도 문제와 관련한 향후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국무부는 성 김 6자회담 특사도 함께 방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 한미 양국은 보즈워스 대표의 방한 기회를 통해 이명박 대통령의 베를린 제안과 북한의 반응 등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고, 대북 식량지원 문제, 남북관계 등 현안에 대해 논의할 것으로 예상된다.

● 한국, 미국산 쇠고기 최대수출시장 등극(5/15)

- 한국으로 수출되는 미국산 쇠고기 규모가 급격히 늘어 한국이 최근 2개월 연속으로 미국산 쇠고기의 최대수출시장으로 떠오른 것으로 파악됐다.
- 농림수산식품부는 15일 미국 농무부가 최근 발표한 '미국산 쇠고기 수출' 통계자료에 따르면 지난 3월 한국으로 수출된 미국산 쇠고기는 2만8천875t(6천366만 파운드)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 이 같은 규모는 작년 3월의 대한(對韓) 쇠고기 수출량 6천801t(1천499만 파운드)보다 무려 3.2배 이상 늘어난 것이고, 전월(1만8천889t, 4천164만 파운드)보다도 52.9% 증가한 것이다.
- 이로써 한국은 전통적으로 미국산 쇠고기의 1~3위 수출시장이었던 멕시코(1만9천995t, 4천408만 파운드), 일본(1만5천676t, 3천456만 파운드), 캐나다(1만3천600t, 2천968만 파운드)를 누르고 미국산 쇠고기의 최대 수출시장 자리를 차지했다.
- 지난 3월 한 달간 수출된 미국산 쇠고기가 총 11만1천261t(2억4천529만 파운드)이었다는 점에서 전체 수출량의 26%가 한국으로 수출된 셈이다. 지난 2월에도 한국으로 수출된 미국산 쇠고기는 전체 수출량의 21.1%인 1만8천889t(4천164만 파운드)으로 다른 어느 나라로 수출된 양보다 많았다.
- 올해 들어 3월까지 미국에서 한국으로 수출된 쇠고기는 6만265t(1억3천286만 파운드)으로 2009년 한 해 동안 한국으로 수출된 미국산 쇠고기 규모(6만3천817t)에 육박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 2008년 4월 한국이 미국과 쇠고기 전면수입을 합의한 뒤 광우병을 우려해 미국산 쇠고기 수입을 반대하는 '촛불시위'가 전국을 뒤흔들었던 것을 돌이켜보면 가히 '상전벽해'와 같은 결과가 아닐 수 없다는 지적이다.
- 한국으로 수출되는 미국산 쇠고기가 크게 늘어난 것은 작년 11월말부터 한국에서 구제역이 발생, 국내산 쇠고기 공급이 줄어들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 미국 농무부에 따르면 미국산 쇠고기 대한(對韓) 수출량은 작년 11월 1



- 만2천53t이었으나 구제역 발생 직후인 12월 1만2천292t으로 약간 늘었고, 올해 1월에도 1만2천501t으로 전달과 비슷한 수준을 유지했음.
- 하지만 구제역 확산을 우려한 대규모 매몰처분의 영향이 가시화되면서 올해 2월에 미국산 쇠고기의 한국 수출이 전달에 비해 51.1% 급증했고 3월에 또다시 2월에 비해 52.9%나 크게 늘었음. 이에 따라 아직 통계가 발표되지 않은 4월, 5월의 경우에도 미국산 쇠고기의 한국 수출량이 전년 같은 달에 비해 크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됨.
 - 또 2008년 '촛불시위' 이후 도축당시 월령 30개월 미만 미국산 쇠고기만 수입됨에 따라 한국 국민들이 미국산 쇠고기의 안전성에 대해 어느 정도 신뢰하게 된 것도 수출증가의 한 요인으로 작용했다고 전문가들은 보고 있음.
 - 맥스 보커스 미 상원 재무위원장 등 미 의회 민주당내 일부 주요 인사들이 최근 미국의 한국산 쇠고기 수입 문제에 대해 강경 입장을 철회한 것도 최근 한국으로의 미국산 쇠고기 수출 급증과 무관치 않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음. 얼마 전까지 이들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의 전제조건으로 한국의 미국산 쇠고기 전면수입을 강력 주장하며 한미 양국 정부를 압박해왔었음.
 - 한편, 농림수산물부 장기윤 검역정책과장은 "미국 농무부의 경우 미국에서 선적된 것을 기준으로 쇠고기 수출 통계를 집계하고 있지만 한국은 도착한 뒤 통관을 마친 것부터 수입통계를 잡고 있어 미국의 쇠고기 수출량과 한국의 수입량 간에는 차이가 발생한다"고 설명했음.

나. 한·중 관계

● 中 선원의 韓 단속원 폭행문제 공식제기(5/12)

- 정부는 중국 어선의 불법적인 조업활동을 단속하는 우리 어업지도 당국에 대해 중국 선원들이 폭력을 행사하며 정상적인 활동을 방해하는 문제를 중국 측에 공식 제기기로 했음.
- 농림수산물부는 12일 '한·중 어업지도 단속 실무회의'가 오는 17일부터 제주도에서 4일간 개최돼 양국 어선의 조업질서 및 상호관심사에 대해 협의한다고 밝혔음.
- 농식품부는 이번 회의에서는 상대국 배타적 경제수역(EEZ)에서의 조업질서 협력방안을 주로 논의할 예정이라며 서해 북방한계선(NLL) 주변 서해특정금지구역에서의 중국어선 침범조업문제를 집중 제기, 중국 정부의 근본적 대책 마련을 촉구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 뿐만 아니라 농식품부는 한국 어업지도선의 정상적인 지도단속 활동을 방해하는 중국어선 및 중국 선원의 폭력행사 문제를 제기해 중국 정부의 재발방지 대책 마련을 촉구할 계획이라도 덧붙였다.

다. 한·일 관계

● 日, 韓 한센인 49명 보상금 추가 지급 결정(5/11)



- 일본 후생노동성이 11일 일제강점기 전남 소록도 등에 강제 격리됐던 한국 한센인 피해자 49명에 대해 일인당 800만 엔(약 1억 원)을 지급하기로 했다고 교도통신이 보도했음. 이는 2006년 2월10일 개정·시행된 일본의 한센병 보상법에 따른 것임.
- 일본은 1943년 '나병 예방법'을 만들어 일본과 식민지 조선, 대만 등지에서 한센병 환자와 가족을 격리했고, 1996년에야 '나병 예방법 폐지법'을 만들었음. 이후 2001년 6월 일본인 피해자에게만 보상금을 주는 내용의 법률을 만들었다가 한국·대만 피해자들로부터 소송을 당했음.
- 일본은 2006년 2월10일에야 한국·대만 피해자에게도 보상금을 주는 내용으로 법을 바꿔 5년간 한시적으로 시행하기로 했음. 이 법의 시행은 지난 1월31일이었음. 1월 말까지 보상금을 신청한 한국인 피해자 595명 중 477명이 이미 보상금을 받는데 이어 11일 49명에 대해 지급 결정이 내려졌고, 69명은 아직 심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 한국 한센인권변호단 관계자는 "전체 한국인 피해자는 수천 명에 이르지만 일본의 한센병 보상법에 '법 시행 당시 생존자와' 2, 3세 제외"라는 단서가 붙어 있기 때문에 보상금 신청자는 600명이 채 안됐다"고 말했다.

● 문화재 환수단체, 日에 있는 南北석탑 반환 요구(5/13)

- 불교계를 중심으로 한 문화재 환수운동 단체가 이번에는 일본 민간 재단이 가져간 평양 울리사지 석탑과 이천오층석탑 환수 운동에 나섰다.
- '대한불교조계종 중앙신도회'와 '문화재 제자리 찾기'는 13일 일본 도쿄에 있는 미술관인 오쿠라 슈코칸(大倉集古館)측에 이 미술관이 보관 중인 울리사지 석탑과 이천오층석탑을 돌려달라고 요구했음.
- 두 단체는 이날 오쿠라 슈코칸에 보낸 서한에서 조선불교도연맹으로부터 법률적 권리를 위임받았다고 밝힌 뒤 앞으로 이에 근거해 소송 등 각종 법적 조치를 할 수 있다고 밝혔다.
- 이들 단체는 또 "북일 수교 과정에서 평양 울리사지 석탑 반환 문제가 거론된다면 일본에 곤란한 일이 될 것"이라며 "하지만 오쿠라 측이 결단을 내려 평양 석탑과 이천 석탑을 남북에 돌려준다면 동북아시아의 화해를 이끌어낼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 대한불교조계종 중앙신도회 등에 따르면 울리사지 석탑은 고려 시대에 만들어져 지금은 터만 남아있는 울리사에 있던 것을 오쿠라 슈코칸을 설립한 일본 실업가 오쿠라 기하치로(大倉喜八郎, 1837~1928)가 1910년대에 일본으로 실어낸 것으로 추정됨.
- 이천오층석탑은 고려시대 이천시 관고동에 세워져 있던 것을 조선총독부가 1914~1915년께 경복궁으로 옮긴데 이어 오쿠라가 1918년 일본으로 반출했음.
- 앞서 남북한은 2005년 일본 야스쿠니신사에서 임진왜란 당시 의병들의 승전비인 '북관대첩비'를 받아내 2006년 3월 북한(함경북도 길주)에 보낸 적이 있음.



● 日서 조선왕실의궤 환수 축하 잔치 열려(5/13)

- 일본 궁내청에 있던 조선왕실의궤를 89년 만에 되찾게 된 것을 기념하는 잔치가 일본에서 열렸음. 13일 오후 7시께 도쿄 오키다호텔에서 조선왕실의궤 환수위원회(공동대표 정념 스님, 김원웅 전 의원 등)와 조선 불교 조계종 중앙 신도회(회장 김의정)가 공동 주최한 '조선왕실의궤 환국 기념 연회'에는 한일 양국 국회의원과 불교계 인사, 시·도의원 등 100여명이 참석했음.
- 김원웅 전 의원은 "식민지 시대에 유출된 문화재는 원래 소유국으로 반환하는 것이 국제적인 관습법으로 정착되고 있는데도 유일한 사각지대가 일본이었다"며 "일본이 동북아시아의 평화와 번영에 중요한 역할을 하려면 과거를 반성하고 문화재 반환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음.
- 월정사 주지 정념 스님은 이날 행사에서 "조선총독부는 1922년 오대산 사고(史庫)에 있던 의궤를 일본으로 실어 날랐고, 실록 수호총섭(實錄守護總攝)을 맡았던 월정사 주지는 이를 막으려고 몸부림쳤지만 역부족이었다"며 "89년 만에 의궤를 되찾을 수 있도록 도와준 여러분께 감사드린다"고 말했음.
- 환수위 측은 일본에서 의궤 환수를 도운 이시게(石毛) 에이코 민주당 부대표와 오기타 야스오(緒方靖夫) 공산당 전 의원 등 정치인과 김순식 변호사, 아리미쓰 겐(有光健) 전후보상네트워크 대표, 와타나베 미쓰구(渡邊貢) 일조협회 회장, 아마우치 사토시(山内聰) 공산당 보좌관, 이소령 고려박물관 이사, 리일만 조선인강제연행 진상조사단 사무국장 등에게 감사패를 줌.
- 이날 행사에는 한국 측에서 환수위의 법상·해문 스님과 이상근 중앙신도회 사무총장, 민주당 최재성·박영선 의원, 한나라당 이정현 의원실의 이현진 보좌관, 대한제국 황사손(황실의 적통을 잇는 자손) 이원 왕실문화원 총재, 허광태 서울시의회 의장, 이석래 평창군수, 최명희 강릉시장, 김윤길 동국대 출판사업팀장, 문화재환수위 청년연대(CARA) 회원 등이, 일본 측에서는 가사이 아키라(笠井亮)·고쿠타 게이지(穀田惠二) 공산당 의원, 핫토리 료이치(服部良一) 사민당 의원 등이 참석했음.

라. 미·중 관계

● 美·中전략경제대화 개막..인권·위안화 '공방'(5/10)

- 미국과 중국은 9일 워싱턴에서 제3차 양국 전략경제대화를 갖고 중국의 인권, 위안화 문제 및 미국의 재정적자, 수출통제체제 완화 문제 등 상호 관심사에 대한 논의에 착수했음.
- 미국은 첫날 회의에서 인권 개선과 경제 개혁이 중국의 이익이라고 중국을 압박했고, 중국은 위안화 환율과 인권 문제에서의 진전을 주장하면서 미국의 비판을 반박했음.
- 조 바이든 부통령은 이날 개막식에 참석, "우리는 인권 분야에서 강한



의견불일치가 있다"면서 "중국의 헌법에 포함돼 있을 뿐만 아니라 중국이 국제적으로 약속한 것에도 포함돼 있는 기본권과 자유를 보호하는 것은 장기적인 안정과 번영을 촉진하기 위한 최선의 방법"이라고 밝혔다.

- 힐러리 클린턴 국무장관도 "(중국의) 인권에 대한 우려는 역내 안정 뿐만 아니라 미국 국내 정치에도 영향을 미친다"고 말했다. 버락 오바마 대통령도 이날 저녁 중국 대표단과의 접견에서 인권문제를 거론할 것이라고 백악관은 전했다.
- 이에 대해 다이빙궈(戴秉國) 중국 국무위원은 "중국은 인권에서 진전을 이루고 있는 중"이라면서 미국인들이 중국을 방문할 경우 "중국이 인권을 포함한 다양한 분야에서 이룬 큰 진전과 중국이 정말 어떤 곳인지를 직접 알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반박했다.
- 티머시 가이트너 미 재무장관은 "우리는 중국의 좀 더 유연한 환율과 좀 더 개방된 자본시장 문제에 대해 계속 대화를 해 나갈 것"이라고 위안화 환율 문제와 자본시장 개방 문제를 제기했다.
- 가이트너 장관은 중국 측에 미국 기업을 위해 좀 더 공정한 경쟁의 장을 제공하고, 금융분야도 개방해 줄 것을 요구했다. 그러나 왕치산(戴秉國) 중국 부총리는 중국은 개방을 계속해 나가고 있다면서 "무역 문제를 정치이슈화 하면 안된다"고 반박했다.
- 천더밍(陳德銘) 상무부장도 위안화 환율 문제와 관련, "무역의 관점에서 보면 중국 위안화에 대한 서방의 우려는 근거가 없다"면서 "왜냐하면 지난 3년간 중국의 무역흑자는 계속 줄어들었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 양국은 북핵문제를 포함한 한반도 문제와 이란 문제, 기후변화 협력 문제 등도 논의했다. 클린턴 장관은 "우리 양국은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유지하는데 핵심적 이익을 공유하고 있다"면서 "이에는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가 포함된다"고 강조했다.
- 그는 또 "우리는 지속적으로 북한에 대해 남한과의 관계를 개선하기 위한 구체적 행동을 취할 것을 요구하고 있으며, 아울러 추가적인 도발을 자제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면서 "우리는 북한이 비핵화를 위한 국제적 의무를 이행하기 위한 불가역적인 조치를 취하기를 원한다"고 말했다.
- 미중 전략경제대화회는 후진타오(胡錦濤) 중국 국가주석과 오바마 대통령의 합의에 따라 지난 2009년 7월 워싱턴 D.C.에서 첫 회의가 개최됐고 작년 5월 베이징(北京)에서 2차 회의가 열린데 이어 이번이 세 번째임. 이번 회의는 10일까지 이틀간 진행된다.

● <中, 전략경제대화서 강온양면 전략구사>(5/10)

- 미중 양국이 9일(이하 현지시간) 워싱턴에서 제3차 전략경제대화 첫날 회의를 시작한 가운데 중국은 인권과 위안화 공세에 차분하게 대응하면서 첨단기술제품 수출 완화를 촉구하는 강공을 펴고 있다는 지적임.
- 예상대로 미국은 '공격수'인 힐러리 클린턴 국무장관을 필두로 중국의 인권문제를 직접 공격했고, 여기에 버락 오바마 대통령과 조 바이든 부



- 통령이 측면 공격에 가세해 눈길을 끌었음.
- 오바마 대통령은 중국 대표단을 접견한 자리에서 "(중국의) 인권에 대한 우려는 역내 안정은 물론 미국 국내 정치에도 영향을 미친다"고 지적했음. 바이든 부통령은 개막식에서 "미중 양국이 인권 분야에서 강한 의견 불일치가 있다"고 거론했음.
 - 이에 중국은 그런 공격을 예상한 듯 '홍분'하지 않으면서 적당하게 받아넘기는 모양새임. 중국은 이미 인권분야에서 '나름대로' 발전해가고 있으며, 각 국가마다 사정이 다른 만큼 미국 기준으로 판단하지 말아달라는 주문을 하고 있어 보임. 다이빙궈(戴秉國) 중국 국무위원은 오바마 대통령 접견한 자리에서 이런 취지로 입장을 전달했음.
 - 지난 6일 중국 외교부의 추이텐카이(崔天凱) 부부장이 "미국 측에게 개별 인권사안에 매몰되기보다는 중국 내 인권 발전상에 더 많은 관심을 가져달라고 충고하고 싶다"고 밝혀, 회담에서 중국이 미국의 인권공세에 강하게 맞설 것으로 예상됐으나 이와는 달리 '로키(Low-key)'로 대응하고 있다는 지적임.
 - 위안화 환율과 자본시장 개방 등을 골자로 한 미국의 파상적인 압박 공세에는 중국이 경제협력 강화 카드로 우회 대응하는 양상임.
 - 첫날 경제 분야 회담에서 미국 측 공동의장인 티머시 가이트너 재무장관이 '좀 더 유연한 환율', '좀 더 개방된 자본시장', '미국 기업을 위한 좀 더 공정한 경쟁의 장', '금융 분야 개방' 등을 강력하게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음.
 - 그러자 중국 측은 개별 항목별로 맞서기보다는 미중 간 무역 불균형을 초래한 근본적인 원인은 무엇보다 미국의 중국에 대한 수출통제체제 탓이라며 이를 해제해야 '상생'할 수 있다는 논리를 펼 것으로 알려졌음.
 - 관영 신화통신은 10일 대표단의 일원인 천더밍(陳德銘) 상무부장이 "미국의 중국에 대한 첨단기술제품 수출제한 조치로 많은 미국 기업들이 중국에서 기회를 상실하고 있으며, 그런 상황은 중국에도 손해"라면서 "미국은 이런 제한조치를 해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고 전했다.
 - 신화통신은 미 정부가 걸고 있는 첨단기술 수출제한 품목은 2천여 개에 달하며, 이는 중국 경제에도 막심한 손해이지만 미국 기업에도 적지 않은 손실일 것이라고 소개했음.
 - 경제 분야의 중국 측 공동의장인 왕치산(戴秉國) 부총리는 "현재 세계경제가 천천히 회복되고 있지만 상황은 여전히 복잡하고 불확실성에 휩싸여 있다"고 진단하고서, "강력하고 지속가능한 회복 드라이브가 지금으로선 가장 중요하다"면서 미중 간 '협력'을 강조했다.
- 中, 제3차 미·중전략경제대화 '원만한 성공'(5/11)
- 중국은 10일 워싱턴에서 폐막된 제3차 미·중전략경제대화가 원만한 성공을 거뒀으며 건설적인 성과를 냈다고 긍정적으로 평가했음.
 - 신화통신 등 중국 매체 11일 보도에 따르면 중국 측 공동대표인 왕치산(王岐山) 국무원 부총리는 폐막기자회견에서 미국이 첨단기술제품의 중



- 국 수출규제를 완화키로 승낙하고 향후 미중상무연합회를 통해 중국의 시장경제지위를 전면승인키로 했다며 이번 양국 간 전략경제대화가 원만한 성공을 거뒀다고 밝혔다.
- 왕치산 부총리는 또 이번에 '강력하고 지속가능하며 균형 잡힌 성장과 경제협력을 위한 미중 전면적 프레임워크'가 체결된 것은 양국이 앞으로 더욱 크고 긴밀하며 광범위한 경제협력을 이뤄나갈 것임을 명확하게 보여주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 미·중 양측은 투자보호협정 협상을 계속 추진하고 지식재산권 보호를 강화키로 했으며 상품의 품질 향상, 식품안전 분야에서의 협력을 확대키로 했다고 왕 총리는 소개했다.
 - 신화통신은 이번 미중전략경제대화에서 양국 간 포괄적이고 생산적인 협의가 이뤄지고 일단의 건설적인 결과가 도출됐다고 평가했다.
 - 신화통신은 또 이번에 체결된 '강력하고 지속가능하며 균형 잡힌 성장과 경제협력을 위한 전면적 프레임워크'의 전문을 보도하고 "두 경제대국이 거시경제 정책에서 협력과 소통을 강화하고 강력하고 균형 잡힌 성장을 추진키로 약속했다"고 전했다.
 - 신화통신은 양국이 이번 전략경제대화에서 무역균형을 촉진하기 위한 방안을 찾고 교역 및 투자분쟁을 건설적이며 협력적인 방식으로 해결키로 했으며 금융 분야 협력을 강화키로 했다고 덧붙였다.

● 中, 美와 호혜적 군사관계 희망(5/12)

- 중국이 천빙더(陳炳德) 인민해방군 총참모장의 방미를 계기로 미국과 상호 존중과 호혜적 협력적인 군사관계를 희망했다고 관영 신화통신이 12일 국방부 고위당국자를 인용해 보도했다. 중국 국방부의 첸리화(錢利華) 외사판공실 주임은 중국은 새로운 형태의 중미 군사관계를 원한다면서 이 같은 입장을 피력했다.
- 첸 주임은 이어 천빙더 총참모장이 15~22일 미국을 방문해 마이크 멀린 합참의장과 회담하고, 로버트 게이츠 국방장관과 힐러리 클린턴 국무장관에 이어 톰 도널런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을 차례로 만날 예정이라고 소개했다.
- 그는 그러면서 인민해방군 총참모장의 방미는 7년 만에 이뤄지는 것이라면서, 이는 지난 1월 후진타오(胡錦濤) 국가주석의 방미를 통한 버락 오바마 대통령과의 정상회담 합의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천빙더 총참모장의 방미는 지난 1월 게이츠 장관의 방중에 대한 답방 형식으로 이뤄지는 것임.
- 첸 주임은 "양국 간 최고위급 군사 당국자들 간의 회동을 통해 상호 이해와 신뢰, 협력을 증진시키게 될 것"이라면서 "건강하고 안정적이면서 신뢰할 만한 군사관계는 중미 양국 간 상호 존중과 호혜의 협력적 파트너십을 구축 해가는데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강조했다.
- 작년 초 미국이 대만에 64억 달러 상당의 첨단무기를 판매키로 결정하는데 대해 중국이 강하게 반발하면서 양국 간에 예정됐던 군사교류가 사



실상 중단됐었음. 이는 천안함 사건을 포함한 한반도 긴장 고조와 남중국해 분쟁, 이란 핵문제 등과 관련한 미중 간 대립으로 이어지기도 했음.

- 그러다가 지난 1월 게이츠 장관의 방중과 미중 정상회담을 계기로 양국 군사관계가 회복하기 시작했음. 지난 9~10일 워싱턴에서의 제3차 미·중 전략경제대화에서도 양국 군사 지도자들 간의 대면을 통한 안보 대화가 이뤄졌고, '전략안보대화'라는 이름으로 고위급 교류를 하기로 합의해 눈길을 모았음.

● 中 전략경제대화 대표단, 마무리외교 주력(5/12)

- 왕치산(王岐山) 부총리와 다이빙궈(戴秉國) 국무위원을 필두로 한 중국의 전략경제대화 대표단이 회담 후에도 미 정부와 의회를 상대로 마무리 외교에 주력했다고 관영 신화통신이 12일 보도했음.
- 왕 부총리는 미·중 제3차 전략경제대화 폐막 다음날인 11일 워싱턴에서 벤 버냉키 연방준비제도 의장을 만났음. 그는 이 자리에서 "양국이 전략경제대화에서 많은 성과를 거뒀다"면서 "중미 간 경제협력은 양국에는 물론 세계에도 이익이며 중국은 미국과 경제와 무역, 투자, 금융, 사회간접시설 등의 분야에서 협력을 강화하고 싶다"고 강조했다.
- 그는 그러면서 "양국은 경제 이슈가 정치화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주문했음. 아울러 "세계경제가 회복할 수 있도록 하는 게 급선무"라며 "G20(주요 20개국)의 틀 안에서 미중 양국 간 협력을 강화하자"고 덧붙였다.
- 왕 부총리는 또 전략경제대화 종료 후에 데이비드 캠프 하원 세입위원장을 포함한 미 의원 20명을 만나 전략경제대화의 결과를 설명하면서 미중 경제협력 강화의 필요성을 역설했음.
- 그는 미 의원들에게 최근 몇 년 새 많은 미국 기업들이 대중 투자로 이익을 증대시켜가고 있고 중국 기업의 대미 투자도 확대되는 추세라면서 이는 중국에서의 투자 환경이 지속적으로 개선돼가는 증거이자 양국 경제협력이 서로에게 이익이 된다는 점을 말해주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 왕 부총리는 특히 중국 정부는 대외개방 정책을 지속하고 외국 기업에 우호적인 투자환경을 만들어 갈 것이라고 약속하면서 대미 무역흑자를 추구하지 않을 것이라고 역설했음.
- 그는 이어 미국도 중국에 대한 첨단기술제품 수출제한 조치를 해제해야 한다며 이를 위해 미 의원들이 적극 나서달라고 주문했음.
- 다이빙궈 국무위원은 존 케리 상원 외교위원장과 조 리버만 상원 국토안보위원장 등을 만났음. 다이 위원장은 후진타오(胡錦濤) 국가주석과 버락 오바마 대통령간의 지난 1월 정상회담에서 상호 존중과 호혜를 바탕으로 협력적인 파트너십을 만들어가기로 합의가 이뤄졌다면 "이는 현재의 상황이자 미래 발전의 방향"이라고 강조하고, 협력을 당부했음.



● 中 외교부, 클린턴 '헛수고 발언' 비판(5/14)

- 힐러리 클린턴 미국 국무장관이 최근 중동의 민주화 시위 파급을 차단하려는 중국의 노력을 '헛수고(fool's errand)'라며 비난한 것과 관련해 중국 외교부가 뒤늦게 공식 대응에 나섰다.
- 중국 외교부 장위(姜瑜) 대변인은 14일 클린턴 장관의 발언과 관련해 "어떤 사람이라도 중국을 혼란이 발생한 중동 국가들과 비교하는 것은 합당치 않은 것"이라고 밝혔다.
- 장 대변인은 외교부 홈페이지에서 "클린턴 장관이 지난 10일 미국 시사 월간지 '애틀랜틱 매거진' 최신희와 인터뷰를 통해 한 발언을 어떻게 평가하느냐"는 기자의 서면질문에 답하는 형식으로 이같이 말했다.
- 클린턴 장관은 지난 10일 공개된 이 월간지와의 인터뷰에서 중동지역의 민주화 시위가 중국으로 번지는 것을 막으려는 중국의 행동을 가리키며 "그들은 역사를 멈추게 하려고 노력하고 있지만 이는 헛수고"라고 비난했다.
- 장 대변인은 이어 "중동의 혼란을 중국으로 확산시키려거나 중국인이 자주적으로 선택한 발전의 길을 변화시키려는 어떠한 시도도 모두 헛수고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 이에 앞서 인민일보 자매지인 환구시보(環球時報)도 13일자 1면 전면 기사와 사설을 통해 힐러리 장관의 발언은 중국을 존중하지 않는 태도를 드러낸 것이며 스스로 국무장관으로서 위신을 깎아내린 것이라고 비난했다.
- 중국 정부는 중동의 민주화 분위기의 영향을 받아 지난 2월 중국에서 '재스민 시위' 조짐이 나타난 이후 민감하게 반응하면서 민주화 운동가, 인권 변호사, 예술가들 수십 명을 구금하는 등 강도 높게 탄압하고 있어 국제사회로부터 비판을 받고 있음.

● 中 천빙더 총참모장, 미국 방문(5/15)

- 중국의 천빙더(陳炳德) 인민해방군 총참모장이 미국 방문을 위해 15일 베이징(北京)을 출발했다고 반관영 통신사인 중국신문사가 보도했음.
- 인민해방군의 최고위급 지도자인 천빙더는 총참모장으로서 7년 만에 미국을 방문하는 것임. 15~22일로 예정된 방미기간에 천빙더는 카운트파트인 마이크 멀린 합참의장과 회담하고 로버트 게이츠 국방장관과 힐러리 클린턴 국무장관에 이어 톰 도널런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을 차례로 만날 예정임.
- 중국 국방부의 첸리화(錢利華) 외사관공실 주임은 지난 12일 "양국 간 최고위급 군사 당국자들 간의 회동을 통해 상호 이해와 신뢰, 협력을 증진시키게 될 것"이라면서 "건강하고 안정적이면서 신뢰할 만한 군사 관계는 중미 양국 간 상호 존중과 호혜의 협력적 파트너십을 구축 해가는데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강조한 바 있음.
- 중국신문사는 이날 천빙더 총참모장의 방미로 "양국이 서로 성과를 도출하고 신뢰를 강화하고 협력을 확대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



- 음.
- 작년 초 미국이 대만에 64억 달러 상당의 첨단무기를 판매하기로 결정한 데 대해 중국이 강하게 반발하면서 양국 간에 예정됐던 군사교류가 사실상 중단됐었음. 이는 천안함 사건을 포함한 한반도 긴장 고조와 남중국해 분쟁, 이란 핵문제 등과 관련한 미중 간 대립으로 이어지기도 했음.
 - 그러다가 지난 1월 게이츠 장관의 방중과 미중 정상회담을 계기로 양국 군사관계가 회복하기 시작했음. 지난 9~10일 워싱턴에서의 제3차 미·중 전략경제대화에서 '전략안보대화'라는 이름으로 고위급 교류를 하기로 합의해 눈길을 모았음.
 - 천빙더 총참모장의 방미는 열린 미 합참의장의 초청에 따른 것으로, 미중 간에 군사적 경색 국면이 해소된 후 이뤄지는 인민해방군 최고위급의 첫 미국 방문이라는 점에서 주목됨.

마. 미·일 관계

● 日 "후텐마 미군기지 합의 고수"(5/12)

- 일본 정부는 오키나와현 후텐마(普天間) 미군 기지를 현 내로 이전한다는 내용의 일·미 합의를 고수하겠다고 12일 밝혔음.
- 에다노 유키오(枝野幸男) 일본 관방장관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후텐마 기지 이전과 관련해) 일·미 합의를 착실히 이행한다는 데 있어 정책 변화는 없다"며 미국 유력 의원들의 기지 이전계획 재검토 요구를 일축했음.
- 앞서 전날 미국 민주당 소속 칼 레빈, 짐 웹과 공화당 소속 존 매케인 등 미 상원의원 3명은 공동성명을 통해 양국 정부에 후텐마 기지 이전 계획을 재검토할 것을 촉구했음.
- 이들은 지난 3월 대지진과 쓰나미 피해를 입은 일본이 재건에 더 힘써야 할 필요가 있다면서 이같이 주장했음.
- 미·일 양국은 작년 5월 기지를 같은 현에 있는 나고(名護)시 헤노코(邊野古) 연안으로 옮기기로 합의했으나 관련 논란으로 하토야마 유키오(鳩山由紀夫) 당시 일본 총리가 물러나는 진통을 겪은 바 있음.

● "日 간 총리, 원전 냉각수 투입 오바마에 보고"(5/15)

- "지금 막 헬리콥터 방수(후쿠시마 원전에 냉각수 투입)를 마쳤습니다" 지난 3월 17일 후쿠시마(福島) 제1원자력발전소의 원자로와 사용 후 연료 냉각을 위해 일본 정부가 처음으로 헬리콥터로 공중에서 냉각수를 투하한 뒤 간 나오토(菅直人) 총리가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에게 이렇게 '보고'했다고 아사히신문이 15일 보도했음.
- 이 신문에 따르면 후쿠시마 원전 사고 직후 미국은 일본 정부에 방사성 물질의 대량 유출 사고 수습을 위한 신속한 조치를 취하지 않을 경우 일본에 주재하는 자국민에게 강제 대피 명령을 내리겠다고 압박하자 일



- 본 정부는 미국에 뭔가 보여줘야 할 필요성에 몰렸음.
- 미국이 자국민에게 대피령을 발동하면 국제사회의 동요가 건잡을 수 없게 됨. 이런 배경에서 결정된 것이 헬리콥터를 통한 냉각수 투입이 었음. 당시 간 정부는 헬리콥터 방수는 효과가 거의 없다고 생각했지만 3월 17일 오전 간 총리가 오바마 대통령과 전화회담을 하기 전까지 일본이 사태 수습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줘야 했음.
 - 이에 따라 일본 정부는 미일 정상회담 30분 전 헬리콥터를 동원해 후쿠시마 제1원전 3호기의 상공에서 7.5t의 물을 뿌렸고 이 사실을 간 총리는 오바마 대통령과의 전화에서 바로 '보고'했음. 오바마 대통령은 이로부터 18시간 후 워싱턴의 일본대사관을 방문해 조문을 했고, 미군을 대대적으로 투입해 피해지역을 지원하는 도모다치(친구) 작전이 전개됐음.
 - 일본 정부는 미국에 원전 상황을 자세히 알리고 협조를 구하기 위해 3월 22일에는 미군 지도부와 미 원자력규제위원회(NRC)가 참여하는 '후쿠시마 원전 사고 대처를 위한 일미협약'을 발족했음.
 - 처음엔 일본 측이 정보를 수집하려는 미국을 견제해 미일 협력이 원활하지 않았으나 결국 민물 냉각수 주입, 수소 폭발을 막기 위한 격납용기 내 질소 주입, 원자로 내 핵연료 냉각을 위한 수관(水棺)작업 등 미국 측의 조언이 대부분 수용됐음. 도쿄전력이 지난달 17일 발표한 후쿠시마 제1원전 냉각 정상화 로드맵(일정표) 내용에도 미국의 주장이 반영됐으며, 발표 2시간 전 당시 도쿄를 방문하고 있던 힐러리 클린턴 국무장관에게 전달됐음.
 - 결론적으로 원전 사고가 터진 뒤 일본 정부가 초동 대응에 우왕좌왕하자 불안을 느낀 미국이 개입하기 시작했고 이후 사태 수습은 미국이 주도했음.

바. 중·일 관계

● "中, 서태평양서 방사능 오염 조사 계획"(5/14)

- 중국이 서태평양의 방사능 오염 정도를 조사할 것으로 알려지자 일본이 자국 영토라고 주장하는 오키노토리(沖ノ鳥) 주변을 조사하는 것 아니냐며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음.
- 14일 교도통신에 따르면 중국 신경보(新京報) 인터넷판은 중국 국가해양국이 올해부터 5개년 계획으로 서태평양에서 방사성 물질이 해양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관측·조사할 방침이라고 보도했음.
- 중국 국가해양국 간부는 신경보에 "서태평양은 우리나라(중국)의 해역과 일의대수(一衣帶水:한기닥의 띠와 같은 좁은 바닷물을 사이에 둔 관계)와 같다"고 말했음.
- 앞서 류츠구이(劉賜貴) 국가해양국장은 9일 니와 우이치로(丹羽宇一郎) 주중 일본 대사와 만나 해양 환경에 대한 방사성 물질의 영향을 조사하고, 중일 해상 경비 당국 간에 핫라인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



음. 이에 대해 일본 측은 서태평양에는 자국 영토인 오키노토리가 있다며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음.

- 일본은 서태평양상의 산호초인 오키노토리에 콘크리트를 덮은 뒤 자국 영토인 '섬'이라고 주장하며 이 섬 주변 200해리를 배타적경제수역(EEZ)으로 설정했음. 일본은 오키노토리를 자국 영토로 굳히겠다고 올해부터 해양조사선 등 대형 선박이 정박할 수 있는 시설을 건설할 계획임. 이에 대해 중국은 오키노토리는 바위이고, 주변 바다는 공해라고 맞서고 있음.

● 中수뇌부의 잇단 親 日本행보 주목(5/15)

- 중국 원자바오(溫家寶) 총리가 일본 대학생 15명에게 '애정 어린' 답신을 보냈음.
- 지난해 5월 일본 방문 때 야구도 함께 하면서 어울렸던 일본 조치대(上智大)의 야구부 학생들이 보낸 안부 편지에 대한 회신이었음. 일본 대학생들은 원 총리가 방일 후 자신들을 상하이(上海) 박람회 초청해준 데 대해 감사함을 표시했고, 원 총리는 "정성어린 편지에 받고 매우 기뻐했으며 (편지에 실린 각자의 글과 사진을 보니) 함께 야구하던 기억이 떠오른다"고 화답했음.
- 반관영 통신사인 중국신문사는 15일 원 총리의 답신 내용을 소개하면서, 작년 5월 31일 새벽 원 총리가 방일 일정 중에 조치대 학생들과 야구하던 장면을 찍은 사진과 대화 내용을 공개했음.
- 원 총리의 이런 행보는 이번 주로 예정된 한국·중국·일본 정상회담을 앞두고 일본에 대한 친근감을 표시하려는 정치적인 제스처로 보임.
- 중국과 일본은 지난해 다오위다오(釣魚島, 일본명 센카쿠(尖閣)) 갈등과 그에 이은 중국의 대일 희토류 수출 중단 보복 등으로 대립해왔으나 지난 3월 일본 대지진과 쓰나미, 후쿠시마 원자력 발전소 사고를 거치면서 양국 관계가 회복 조짐을 보이고 있음. 원 총리의 '친일 제스처'는 이런 상황과 무관치 않다는 지적임.
- 앞서 지난 4일과 5일 중국의 차기 최고지도자로 유력시되는 시진핑(習近平) 국가부주석은 베이징에서 일중우호연맹 대표단과 하토야마 유키오(鳩山由紀夫) 전 총리를 접견한 자리에서 양국 간 관계 강화 의지를 피력했음.
- 시 부주석은 특히 "일본과의 민감한 문제들을 적절하게 처리해야 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위해 서로 전략적 신뢰를 강화하고 공통 이익을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해 눈길을 끌었음.

사. 일·러 관계

● 러시아, 쿠릴열도 2개섬 군사 요새화(5/12)

- 러시아가 일본과 영유권 분쟁을 빚고 있는 쿠릴열도(일본은 '북방영토'로 표기)의 2개 섬에 최신예 미사일 등을 갖춘 군사 거점을 구축한다고



- 요미우리신문이 12일 인테르팍스 통신을 인용해 보도했음.
- 이 신문에 따르면 러시아 국방부는 쿠릴열도 주둔 부대의 증강 계획을 조만간 제출할 방침이며, 드미트리 메드베데프 대통령이 이를 승인할 전망이다.
 - 러시아 국방부는 일본과 영유권 분쟁을 빚고 있는 남 쿠릴열도 4개 섬 가운데 구나시리(國後)와 에토로후(擇定) 2개 섬에 이동식 대함 미사일 시스템 등 최신예무기를 배치해 군사 요새화한다는 방침임.
 - 니콜라이 마카로프 참모총장은 "올해 후반에 쿠릴열도의 군사력 증강에 착수하면 2014년이나 2015년까지 주둔부대가 최신 무기를 갖춰 전혀 새로운 부대로 바뀌고 전투능력도 수배 향상될 것이다"고 말했다.
 - 국방부는 쿠릴열도의 군사 거점에 이동식 대함미사일 시스템을 비롯해, 방공미사일 시스템, 대전차 공격헬리콥터 등도 배치할 방침임. 하지만 약 3천500명인 주둔 병력은 증원하지 않을 방침임.
 - 이런 군비 강화는 작년 11월 러시아 지도자로는 최초로 쿠릴열도를 방문했던 메드베데프 대통령이 지난 2월 아나톨리 세르듀코프 국방장관에게 지시하면서 본격화됐음.

● 러' 정부 고위 대표단 쿠릴열도 방문 단행(5/15)

- 러시아의 세르게이 이바노프 부총리가 이끄는 대규모 정부대표단이 15일 일본과 영유권 분쟁을 빚고 있는 쿠릴열도(일본명 '북방영토')를 방문했다고 리아노보스티 통신 등 현지 언론이 이날 보도했음.
- 러시아 정부 고위 인사가 일본의 3.11 대지진 이후 쿠릴열도를 방문한 것은 처음임. 대표단에는 이고리 레비틴 교통부 장관, 엘비라 나비올리나 경제개발부 장관, 유리 트루트네프 천연자원부 장관, 빅토르 바사르긴 지역개발부 장관 등 중앙정부 고위 인사들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 이바노프 부총리 일행의 쿠릴 방문은 열도 개발과 관련한 국가 장기 프로젝트 이행상황을 점검하기 위한 것으로 알려졌으나 쿠릴열도에 대한 러시아의 영유권 의지에 변화가 없음을 재확인하려는 의도도 반영된 것으로 분석됐음.
- 부총리 일행은 이날 오전(현지시간) 먼저 쿠릴열도 가운데 하나인 '이투롭' 섬을 찾아 현지 부두 시설 등을 둘러본 뒤 현지에서 '2007~2015년 쿠릴열도 사회·경제 발전 프로그램' 진척 상황 점검을 위한 회의를 열고 뒤이어 열도 내 또 다른 섬인 쿠나시르를 찾았음. 이바노프 부총리는 회의에서 이번 방문 목적이 쿠릴열도 발전 프로그램 진척 상황을 점검하는 것이라고 밝혔음.
- 그는 "개인적으로 세 번째 쿠릴열도를 방문했으며 이곳의 자연이 아주 마음에 들지만 첫 방문(2005년)때부터 섬의 사회·경제 상황과 삶의 질은 전혀 마음에 들지 않았다"며 열도 개발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이어 "쿠릴열도 개발 프로그램은 운송 인프라, 에너지, 사회분야 등 3개 주요 문제 해결을 지향하고 있다"고 설명하고 "이를 위해 2015년까지



150억 루블(약 5천850억 원)을 투자할 계획"이라고 밝혔음.

- 부총리는 특히 이날 현지 에너지 문제 해결을 위한 지열 발전소 건설을 제안했음. 그는 "쿠릴열도에서 디젤과 석탄 등을 끝없이 태우는 것은 대안이 될 수 없다"며 "지열 발전소를 개발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음.

아. 기 타

● **中환구시보 "韓언론, 북중 관계 이간"(5/10)**

- 공산당 기관지 인민일보사가 간행하는 환구시보(環球時報)는 10일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이 후진타오 중국 국가주석에게 젠홍(殲轟)-7(JH-7) 전폭기를 달라고 했다가 거절당했다는 보도가 한국에서 나온 것을 '이간책'이라고 비판했음.
- 환구시보는 "북한 지도자 김정일이 작년 5월 방중 했을 때 페이바오(飛豹.JH-7의 별칭)를 포함한 첨단무기를 사게 해 달라고 요청했으나 거절당했다는 보도가 9일 한국에서 나왔다"고 전했다. 국내 한 신문은 9일 익명의 소식통을 인용해 김 위원장이 5월 방중 시 JH-7와 최신형 방사포와 전차를 요구했으나 거절당했다고 보도했음.
- 랴오닝성 사회과학원 남북연구센터의 뤼차오(呂超) 주임은 이 기사에서 "한국 언론 보도에 점점 많은 이간책이 숨어있다는 점을 경계해야 한다"며 "한반도 긴장상태가 계속되는 가운데 한국은 이간책을 사용해 북한을 고립시키고 중국과 북한 사이에 갈등을 일으키려 한다"고 주장했다.
- 아울러 뤼 주임은 "한국과 미국이 걸핏하면 군사연습을 해 가면서 북한을 위협하고, 한국이 첨단 무기를 대량으로 사들여오는 현실에서 북한이 외부에서 무기를 수입해 안전보장을 강화하려는 것은 하나도 이상할 일이 아니다"라고 말했음.
- 뤼 주임은 그러면서 "한반도 정세를 완화시키려면 남북이 함께 앉아 대화를 해야지 단순히 '북중 갈등'을 조장하고 북한의 무기 수입을 비난하는 것은 소용이 없다"고 덧붙였다.
- 북한 전문가인 뤼 주임은 환구시보가 한국을 비판할 때 자주 인용하는 대표적 인사임.

● **"韓中日 정상, 원전사고 정보공유 명문화"(5/10)**

- 한국과 일본, 중국 정상이 이달 하순 열리는 회담에서 원자력발전소 사고시의 정보 공유를 공동성명에 명문화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요미우리 신문이 10일 보도했음.
- 이 신문에 따르면 한중일 3국은 후쿠시마(福島) 제1원자력발전소 사고를 계기로 원전 사고시의 3국 정보 공유 체제를 정비하기로 방침을 정했음. 이에 따라 한중일 3국은 이달 21일과 22일 도쿄에서 열리는 정상 회담에서 공동성명에 이를 포함하는 방향으로 최종 협의를 하고 있음.
- 후쿠시마 원전의 방사성 물질 오염수 바다 방출과 관련 한국과 중국을 비롯한 국제사회는 일본의 통보 지체와 정보 제공의 불투명성을 비판하



는 목소리가 높았음. 이에 따라 이번 한중일 정상회담에서는 원전 사고 발생 시 당사국이 정보를 긴급 통보하고, 사고 상황과 대응책 등을 다른 2개국에 상세하게 설명하는 방식으로 정보 공유 체제를 정비하는 방안이 합의될 방침임.

- 3국 정상은 또 정기적인 원자력 전문가 회의를 여는 방안도 검토할 것으로 예상됨. 한국과 일본은 지난달 중순 도쿄에서 열린 협의를 발전시켜 원전의 안전관리와 방사선 측정의 방식, 식품의 안전성 등 원자력 분야에 초점을 두는 회의를 구상하고 있음.
- 한중일 3국은 2008년 12월 정상회담에서 방재대책의 강화를 포함한 '방재협력에 관한 공동발표'를 한 바 있으며, 이번에는 이를 새롭게 해 원전대책을 내놓을 예정임.
- 이번 공동 성명에서는 원전 사고 이외의 재해에 대해서도 협력 방식을 명기해 긴급 구조대의 수용 체제 정비, 재해 발생 시의 연락·정보 공유 체제 강화 등도 다룰 전망이다.

● <한중일 '정상회의 개최장소' 묘한 신경전>(5/11)

- 오는 21일 일본에서 열리는 제4차 한·중·일 정상회의의 개최장소를 둘러싸고 3국 사이에 묘한 신경전이 감지되고 있음. 주최 측인 일본이 당초 개최지로 예정했던 수도 도쿄(東京) 대신 대형 원전사고가 발생한 후쿠시마(福島)에서 여는 안을 들고 나온 데 따른 것임.
- 이는 3국간 원자력안전 협력의 상징성을 극대화하는 동시에 후쿠시마현 전체가 국제사회에 알려진 것처럼 심각하게 위험한 상태가 아니라는 점을 부각시키려는 전략적 포석으로 풀이되고 있음.
- 일본 현지 언론은 11일 일본 정부가 이명박 대통령과 원자바오(溫家寶) 중국 총리가 후쿠시마시에 도착해 후쿠시마현 청사 등에서 정상회의 개최를 선언한 뒤 도쿄로 이동해 본회담을 하는 일정을 한국과 중국에 제시했다고 보도했음.
- 그러자 중국이 부정적 반응을 보이고 나섰음. 원 총리에게 위험을 감수토록 할 수 없다며 난색을 표했다는 게 현지 언론의 보도임. 여기에는 미국 정부가 후쿠시마 원자력발전소의 반경 80km 이내에 거주하는 자국 국민에게 대피를 권고하고 있는 상황도 고려된 것으로 알려졌다. 후쿠시마현의 상당 부분은 바로 원전 반경 80km 이내에 있다는 게 외교 소식통들의 전언임.
- 일·중이 이처럼 신경전을 펴고 있는 가운데 우리 정부는 이명박 대통령이 일·중 정상과 함께 일본 미야기현 센다이(仙臺)시를 방문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어 주목되고 있음.
- 우리 총영사관이 주재하고 있는 센다이시는 대지진 참사 피해를 입은 주요 지역 중 하나이며 우리 교민의 피해도 가장 컸던 곳으로 알려져 있음. 후쿠시마 원전으로부터는 100km 가까이 떨어져 상대적으로 안전한 것으로 평가되는 지역임.
- 이 대통령은 지난 2008년 5월 대지진 참사를 겪었던 중국 쓰촨(四川)성



- 을 전격 방문해 중국은 물론 주변국들로부터 높은 평가를 받은 바 있음.
- 이 대통령은 2008년 5월27일 중국 베이징을 방문해 후진타오(胡錦濤) 중국 국가주석과 정상회담을 한 자리에서 쓰촨성을 방문하겠다는 뜻을 전달했고 후 주석은 감사하다는 뜻을 표명하며 즉각적인 준비를 지시, 쓰촨성 방문이 전격 성사됐음.
 - 우리 정부의 이 같은 구상에 따라 3국은 샌다이에서 정상회의 개최를 선언한 뒤 도쿄로 이동해 본회의를 하는 쪽으로 의견을 조율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 국제관계연구센터 제공